

# 맛의 기적이 필요할 때 PICK 미원



사탕수수를 발효하여 만든  
감칠맛 **미원**



SINCE 1956

사용량: 한꼬집 



커버스토리  
**촛불이 이겼습니다!**  
지난 겨울 내내 함께 했던 촛불 시민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촛불이  
이겼습니다!



시민운동 종합정론지 2017\_03, 04월호 | 월간경실련 통권 156호

경실련 | 공동대표 박상기 선월몽산 김원배 김대래 중앙위원회의장 권영준 상임집행위원장 양혁승 정책위원장 소순창 사무총장 윤순철  
월간경실련 | 발행인 윤순철 편집인 채준하 편집기자 윤은주  
발행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고번호 종로마 00088 정보간행물 전화 02)766-5627 팩스 02)741-8564~5  
편집디자인 ㈜현대아트컴 인쇄 ㈜현대아트컴 1990년 5월 24일 등록 서울라10131 2016년 10월 13일 발행

CCEJ(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26-9 Dongsung 3gil Chongro-gu, Seoul, Korea  
Phone : 82-2-766-5627 Fax : 82-2-741-8564-5 http://www.ccej.or.kr

## CONTENTS

### 동승동칼럼

06 직접 민주주의의 강화로 대통령주권이 아닌 주권재민을 실현해야 / 윤순철

### 기획특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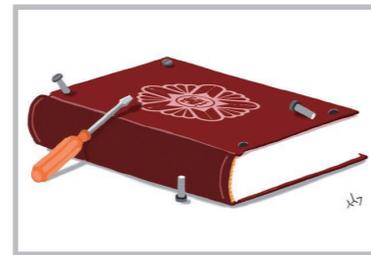
- 08 ① 2017년 대한민국과 대선 / 소순창
- 10 ② 2017년 경실련 활동계획 / 권오인
- 13 ③ 3월 임시국회, 개혁입법의 골든타임이 흘러가고 있다 / 유애지
- 18 ④ 逐鹿者不見山(축록자불견산), 정략적 개헌논의를 경계한다! / 김삼수

### 집중이슈

21 차별적 건강보험료, 이제는 개편하자! / 남은경

### 시사포커스

- 27 ① 정경유착의 주범 전경련은 해체되어야만 한다! / 정택수
- 30 ② 박근혜-최순실의 꼴단지 국고로 환수하라 / 최예지
- 32 ③ 임대주택 실적 부풀리기, 참 쉽죠? / 최승섭
- 35 ④ 이재용 부회장 구속된 삼성,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 이성윤
- 37 ⑤ 경기 침체의 범인은 청탁금지법이 아니라 정부다 / 유애지
- 39 ⑥ 도찰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겠다며 사찰을 하려는 정부 / 박지호



**18** 기획특집4  
逐鹿者不見山(축록자불견산),  
정략적 개헌논의를 경계한다!



**45** 지역이야기  
부산 송도해상케이블카 복원사업  
특혜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 통일마당

42 개성공단은 재가동 되어야 한다 / 조성훈

### 지역이야기

45 부산 송도해상케이블카 복원사업 특혜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 배성훈

### 경실련이야기

- 48 ① 윤순철 신임 사무총장 인터뷰 / 회원홍보팀
- 52 ② 안녕하세요! 우리는 경실련 인턴입니다 / 회원홍보팀
- 57 ③ 2017년 겨울 인턴활동 후기 / 이서연

### 카드로 보는 이슈

- 59 ① 개성공단 폐쇄 1년, 지금의 상황은 / 조성훈
- 61 ②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꼭 도입돼야 합니다 / 조성훈
- 62 ③ 선거 연령 18세 하향 / 유애지

### 참여하는 당신이 주인공

- 64 소소한 것도 통하는 광장
- 65 경실련 일일보고
- 68 신입회원 및 회원명단



**48** 경실련이야기 1  
윤순철 신임 사무총장 인터뷰



**52** 경실련이야기2  
안녕하세요!  
우리는 경실련 인턴입니다!

## 직접 민주주의의 강화로 대통령주권이 아닌 주권재민을 실현해야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헌법 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여 헌법을 수호하는 의지로서 현직 대통령을 파면하였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통령에 있고 모든 권력은 청와대로부터 나온다.”는 비정상적 현실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로 바로 세웠다.

국가의 흥망성쇠의 책임은 정치인에게만 있지 않고 국민의 개개인에게도 책임이 있다. 우리 헌법에는 국민의 저항권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저항권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97헌가4, 1997.9.25.) 때문에 저항권은 ‘잘못된 입법 내지 정책에 대해 그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국가권력에 대한 복종을 거부하는 운동인 불복종운동과는 다른 헌법 수호의 수단이자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양면적 성격을 갖는다. 지난 수개월의 촛불 집회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명백하고 중대하게 헌법 파괴 행위와 법 위반을 하고 있음에도 이를 바로잡아야할 국가기관 또는 당리당략에 사로잡힌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을 때 시민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한 기본권의 행사이자 헌법 수호의 저항이었다.

헌법을 개정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부산하다. 헌법은 변화하는 정치, 사회상을 충분히 반영해야한다. 즉 헌법 현실이 변화하면 헌법 규정도 변화해야한다. 현행 헌법은 1987년 10월 29일 공포된 이래 30년 가까이 국가와 시민의 생활규범으로 정착하였으나 새로운 시대적 요청, 국민적 여망, 사회적 흐름을 담아내기에 미흡하여 꾸준히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87년 개헌 당시는 대통령직선제 외에는 환경·소비자·정보화·지방분권 등 시대적 소명을 담아내는 논의는

없었다. 그러나 최근 개헌 논의엔 개헌의 시기를 못 박고 극소수 전문가들만 참여하고 있다. 국민들은 참여할 수 없다. 국회의 헌법 개정 추진은 국회의원 36명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민간인 자문위원회가 개헌안을 마련하고 있다. 개헌이 더 이상 특정 정치인이나 정파에 의하여 독점되는 정략적 논의가 되어선 안 되지만 대통령 선거의 전략이나 권력구조의 개편에만 집중되어서도 안 된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규범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권력을 조직하여 입헌주의를 실현하는 최고규범이기에 국민들이 충분히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들이 논의에 참여 없이 결과에 대해 가부를 투표하는 것만으로 국민적 합의를 거뒀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 시기의 개헌의 중요한 의제중 하나는 직접 민주주의의 확대이다. 국가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일수록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최종결정권과 국민적 통제가 필요하다. 직접 민주주의의 강화는 국민 주권주의의 실현이며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다. 헌법상의 직접 민주주의의 강화는 여러 수단이 있다. 첫째는 헌법에 저항권을 명문화하는 것이다. 독일은 “헌법적 질서를 파괴하고자 시도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다른 구제책이 불가능한 경우 모든 국민은 저항권을 가진다(독일기본법 제20조 4항)”고 명시하여 저항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과 정치지도자들의 위헌, 위법적 국정운영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고하는 의미가 있다. 둘째는 국민주권의 복원을 위한 입법권의 보장으로 헌법과 법률의 제정권과 개정권의 보장이다. 셋째는 국민의 자치권으로 헌법 24조가 규정하는 선거권 외에 국회 결정에 대한 국민승인권 및 거부권(국민투표권)과 중요 정책이나 법안에 대하여 국민투표를 실시를 직접 제안하는 국민발안제이다. 넷째는 선출직 공직자를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해임을 결정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이다. 다섯째는 현재의 정당지지율과 실제 국회의원 의석수의 격차가 커서 이를 유권자의 지지율이 의석수로 반영되도록 하는 직접 대표성의 강화이다.

지금 우리는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시민의 저항으로 파면시키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 역사적 전환점에 있다. 더 이상 헌법을 지키려는 기본권의 행사가 합법이니 불법이니 시빗거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직접 민주주의의 강화는 대통령주권이 아닌 주권재민의 실현이다. 🗳️

## 2017년 대한민국과 대선

소순창 정책위원장. 건국대 행정학과  
sosoon74@hanmail.net

2017년 대한민국은 기로에 서 있다. 서서히 침몰해 가는 위기의 배에서 안간힘을 다 하여 탈출의 뱃고동을 울릴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는 요즘이다. 국민들을 분열로 조장하고, 정작 상식적인 국민들의 촛불을 외면하는 패거리들이 날뛰고 있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로 힘을 잃어 가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의 야누스는 우리를 응시하고 있다. 한편 청년실업, 형해화된 공교육, 무력해진 지역경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설상가상으로 중앙정치인들의 형님예산, 카톡예산, 쪽지예산으로 국가예산은 난도질당하고, 중앙정부는 최순실의 힘에 무참히 짓밟히고 있고, 대기업은 협박과 당근에 앞 다투어 껌팔이 소년으로 전락하였다. 이런 지경인데도 대형 언론들은 눈감고 있었고, 뒤 늦게 시늉만 내는 꼴이라니 토해버리고 싶다.

이번 대선에는 이러한 구조적 뒤틀림을 바로 잡아야 한다. 한 사람의 대통령으로 어림도 없겠지만 방향만이라도 돌이켜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 정의를 다시 세우는 대선이 되어야 한다. 사회적 형평성, 다양성, 민주주의, 그리고 분권의 가치를 회복시키는 대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소외계층이 소망을 갖고, 소수가 배제되지 않으며, 참여와 합의가 상식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회의 대선이 되길 희망한다. 앞으로 다가올 먹구름을 희망의 무지개로 전환할 수 있는 변화의 시작이 되었으면 한다.

이번 대선을 계기로 '국가개조'에 대한 단어가 자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새로운 국가운영시스템을 말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국가운영이 획일적이고, 중앙집권적이어서 국가운영시스템이 동맥경화에 걸려 있다는 진단이다. 더 이상 국가주도의 경제성장은 담보 상태이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앙정치인, 중앙공무원, 대기업, 그리고 중앙언론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말하지 않는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나눠먹기를 배불리 하는데 여념이 없다. 국가운영시스템의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한다. '분권형 국가'를 말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우리 사회가 다양성, 형평성, 연정, 협치, 그리고 다시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고 말한다.

새롭게 분권형 국가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회복했으면 한다. 소외된 약자들을 배려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타인을 인정하고 함께하는 새해가 되었으면 한다. 이러한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중앙과 수도권만 주인이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공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분권형 국가시스템이 이러한 가치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면 한번 분권형 국가를 만드는데 다 같이 나섰으면 한다. 이번 대선을 계기로 말이다. ☺☺☺



# 2017년 경실련 활동 계획

권오인 경제정책팀장  
ok@ccej.or.kr

2017년 5대 사업방향 및 핵심사업

19대 대선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검증(개혁과제, 공약검증, 후보초청토론)</li> <li>▶ 후보자검증(정당 경선 모니터링, 자질 검증 등)</li> <li>▶ 투표참여 독려(후보선택도우미, 정책선거서포터즈 등 캠페인)</li> </ul>
공정한 경제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특혜 청산</li> <li>▶ 전경련 해체 운동</li> <li>▶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배상제 도입</li> <li>▶ 법인세 정상화를 통한 공평과세 확립</li> <li>▶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li> </ul>
소통하는 민주체제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헌 대응</li> <li>▶ 선거제도 개혁</li> <li>▶ 동북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운동</li> <li>▶ EDCF 유상원조 책무성 강화 운동</li> </ul>
민생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격차 줄이기 운동</li> <li>▶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법제화</li> <li>▶ 동지내몰림(Gentrification) 방지 운동</li> <li>▶ 소득중심의 공평한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li> <li>▶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li> </ul>
경실련 활동과 조직의 발전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효율화 및 매뉴얼화</li> <li>▶ 경실련상근활동가 육성기금조성</li> </ul>

경실련은 2017년을 맞아 ▲19대 대선 대응, ▲공정한 경제체제 구축, ▲소통하는 민주체제 확립, ▲민생안정, ▲경실련 활동과 조직의 발전기반 구축이라는 사업방향을 세우고, 핵심사업과 일반사업을 설정하였습니다. 올해는 작년 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조기대선이 가시화되고, 새누리당의 분당에 따른 원내 5개 정당의 탄생 등 여러 가지 정책적 변수가 많은 해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환경에서 경실련은 '19대 대선 유권자운동 프로그램'과 함께, 대내외적 환

경 측, 국회의 상황, 국정농단으로 인한 촛불민심의 요구, 현 경실련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제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핵심적인 의제와 활동계획을 요약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19대 대선 유권자운동

19대 대선 대응 프로그램을 위해 2016년부터 활동해 오던 경실련 비전TF와 결합하여, 핵심의제를 선정하고, 후보검증, 개혁의제 공약화, 공약평가, 투표참여 및 정책선거캠페인 등 다양한 운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공약검증을 위해 꾸려질 정책공약검증단에서는 후보들이 제시하는 공약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장밋빛 헛공약은 없는지 실현가능성과 개혁성 등을 철저히 가려낼 것 입니다. 지역경실련 또한 결합하여, 전국경실련이 합동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정책선거, 민생선거, 깨끗한 선거라는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 공정한 경제체제 구축

공정한 경제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재벌개혁, 법조비리 및 공직사회 부정부패 근절, 조세형평성 제고, 법 지배의 실효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핵심적으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특혜 청산, 전경련 해체 운동,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배상제 도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운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일반사업으로는 법인세 정상화를 통한 공평과세 확립 운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최순실-재벌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에서 나타났듯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양극화 심화의 원천입니다. 아울러 1961년 창립 때부터 정경유착을 목적으로 정권과 재계의 합작으로 설립된 전경련은 이후에도 정경유착 부패, 정치개입을 통한 국론분열 등으로 존재목적 상실했습니다. 특히 2016년 어버이연합을 비롯한 보수단체 지원을 통한 관제데모 주도,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모금 사건은 국민들로부터 즉각적인 해체 목소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나아가 가슴기 살균제 사태, 우병우 전 민정수석 및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 등은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배상제의 도입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이 필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 소통하는 민주체제 확립

경실련은 국민의견을 배제한 정부의 독단적 정책결정과 정치권력의 당리당락

적 행태를 극복하고, 대의 민주제와 협치를 실현하기 위해 소통하는 민주체제 확립에 나설 것입니다. 최근 국회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 있는 개헌 이슈에 대해 개헌 방향 제시, 권력구조에 치우친 논의 차단, 국민주권주의 실현 공론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선거제도 개혁과, 동북아 평화 및 남북 관계 개선운동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생안정으로 희망적인 삶**

최근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로 민생경제는 파탄이 난 상황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민생안정, 민생회복을 통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민생안정을 위한 핵심사업으로는 부동산 격차 줄이기,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법제화, 동지내몰림(Gentrification) 방지, 소득중심의 공평한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 운동을 설정했습니다. 민생안정을 위한 일반사업으로는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개선운동, 농업진흥지역 축소 저지, 저출산 대책(아동수당 도입), 민자고속도로 운영권 연장 저지, 직접시공제 정상화, 사회적경제 포럼, 자동차 결함에 따른 피해구제법 도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실련 활동과 조직의 발전기반 구축**

경실련 운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활동가들에 대한 보상 문제, 업무의 매뉴얼화, 운동의 건전성 및 통합성 제고가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경실련 상근활동가 육성기금 조성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첫 발을 내 딛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주기적 반복사업에 대한 매뉴얼 제작을 하고, 임원 및 전국상근활동가 교육 등을 통해 경실련 운동의 건전성과 통합성 제고에 나설 것입니다.

2017년 경실련의 5대 사업방향과 이에 따른 사업들은 항시적으로 진행할 사업입니다.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19대 대선 집중 가능성을 열어두고 선정한 사업들입니다. 따라서 집중사업과 항시적 사업을 통해 보다 발 빠르고, 효율적인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올 한해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땀 예정입니다. ☺☺☺

# 3월 임시국회, 개혁입법의 골든타임이 흘러가고 있다

유애지 정치사법팀 간사  
aejiyu@ccej.or.kr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18개)〉

1.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처리
2. 전경련 해산 촉구 결의안 처리
3.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4. 선거연령 18세 하향 - 공직선거법 개정
5. 결선투표제 도입 - 공직선거법 개정
6. 집단소송법 제정
7. 징벌적 배상법 도입
8. 기존 순환출자 해소 - 공정거래법 개정
9. 지주회사의 자회사 이하 주식보유 기준 강화 - 공정거래법 개정
10. 공정위 전속고발권 및 3개 기관 고발요청권 전면 폐지 - 공정거래법 개정
11. 지주회사 전환시 총수일이 지배력 강화 방지 - 상법 개정
12. 황제경영 방지를 위한 감사위원 분리 선출 - 상법개정
13. 재벌 특혜 시내면세점 제도 개선 - 관세법 개정
14. 생활가능한 수준의 최저임금 달성 - 최저임금법 개정
15.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법인세 인상 - 법인세법 개정
16.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및 인상률 상한제 도입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17.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 건강보험법 개정
18. GMO 완전표시제 도입 - 식품위생법·건강식품법 개정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와 이로 인한 탄핵 이후 여야가 앞다투어 공언했던 ‘개혁입법’이 지금껏 단 한 건도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정당들은 공언

했던 개혁입법은 외면하고, 오로지 대선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물론 대통령선거는 우리 사회에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을 해야 대선도 제대로 치를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인용해 조기대선이 치러지게 된 상황에서 3월 임시국회는 법안 처리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수밖에 없다.

경실련은 국회가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반드시 개혁입법을 통과시켜 촛불민심을 입법으로 실현할 것을 촉구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개혁입법과제 18개를 선정해 제시했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에서 단 한 건의 개혁입법도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다시 한번 3월 임시국회에 개혁입법을 제안한다.

이미 법안이 제출되어 논의 중이거나 시기적으로 가장 시급한 입법과제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처리, △전경련 해산 촉구 결의안 처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선거연령 18세 하향 등이다. 세월호 특별법의 경우 특조위의 활동이 유가족, 시민사회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6년 9월에 강제로 종료되었다.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 비로소 세월호 선체조사위 설치와 선체조사에 관한 특별법안만 통과했다. 그러나 아직 진상규명이 요원한 상황으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진 세월호 특조위 구성 등 진상규명 특별법의 통과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전경련 해산 촉구 결의안 처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은 이번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이 깊은 개혁입법과제들이다. 전경련의 경우 그동안 거대 재벌의 자본력을 이용한 정경유착과 부패를 일삼아 왔던 곳이다. 전경련은 이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축으로 등장하고, 지난해 의혹이 제기되었던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를 이용한 관제데모 역시 사실로 드러나면서 여전히 정경유착의 온상임을 드러냈다. 사회적으로 전경련의 해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전경련의 해체를 위해 국회에 ‘전경련 해체 결의안’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즉각 통과시켜 정경유착의 뿌리를 뽑는 것이 필요하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오래 전부터 시민사회가 검찰개혁의 방안으로 설치를 촉구해왔던 것이다. 그러던 중 최근 ‘정운호 비리’ 사건에 연루된 홍만표·최유정 변호사 사건, ‘공짜주식’ 뇌물 혐의를 받는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 등

법조비리에 이어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서 드러난 검찰의 문제점 등으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계속되는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봐주기 수사 혹은 표적 수사 등으로 편향적인 수사행태를 보여 온 검찰의 행태를 차단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가 어느때보다 절실하다.

이외에도 경실련이 제시한 18개 개혁입법과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법과제명 (법안명)		개선방안
①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진 특별조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특별조사위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명백히 규명할 수 있도록 함
② 전경련 해산 촉구 결의안		- 국회 전경련 해산 촉구 결의안 조속한 통과
③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 공수처는 외부 통제장치가 미치지 못하는 권력기관, 부패에 취약한 대통령 친인척,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이 되어야 함. 이를 위해 예산과 인사, 조직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외압 없이 비리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함
공직선거법	④ 선거연령 18세 하향	- 공직선거법 상 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조정함.(공직선거법 제 15조, 제16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을 18세 미만의 자로 개정함.(제60조 제1항 제2호)
개정공직선거법 개정	⑤ 결선투표제 도입	- 현행 헌법은 결선투표제 도입 여부를 법률에 위임하고 있음. 공직선거법 개정만으로 결선투표제 도입이 가능한 상황임. 최초 투표에서 과반이상의 당선자가 나오지 않으면 1, 2위 후보만으로 결선투표를 시행해 당선자를 결정하도록 해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⑥ 집단 소송법		- 소비자들의 정당한 피해구제를 위해, 신속하고 적절한 사법적 해결의 방안 중 하나로 「집단소송법」 제정 - 증권분야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보다 용이하게 피해구제를 받고 소송 등에 있어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소비자의 입증책임 완화 등을 위해 문서제출, 증거개시 명령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함.
⑦ 징벌적 배상법		- 고의로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기업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징벌 배상책임을 지도록 「징벌 배상법」 제정.

입법과제명 (법안명)	개선방안	
⑦ 징벌적 배상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법에 관련 내용을 각각 명시하는 것보다 「민법」 및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로서 모든 범위를 아울러야 함. 이를 통해 단순히 책임의 가중만이 아닌, 불법행위의 실질적 예방 등을 도모할 수 있음.</li> <li>- 소비자의 입증책임 완화 등을 위해 문서제출, 증거게시 명령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함.</li> </ul>	
공정 거래법 개정	⑧ 기존 순환출자 해소	-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기존(신규순환출자 금지 시행 2014년 7월 25일 이전) 순환출자 3년 유예를 두고 해소, 해소전 의결권 제한
	⑨ 지주회사의 자회사 이하 주식 보유기준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을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상장·공동출자법인 및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30%)보유하도록 개정</li> <li>- 자회사 아래에 존재하는 손자회사, 증손회사의 경우 자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도록 개정하여, 지주회사-자회사라는 2단계 출자구조로 유도</li> </ul>
	⑩ 공정위 전속 고발권 및 3개 기관 고발 요청권 전면폐지	- 공정위 전속고발권 및 3개 기관 고발요청권 전면 폐지
상법 개정	⑪ 지주회사 전환 시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방지	- 기업 분할 통한 지주회사 전환시 자사주 소각 또는 주주 배분
	⑫ 항제 경영 방지를 위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분리 선출</li> <li>- 사내/사외이사 구분 없이 모든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은 3%로 제한</li> </ul>
⑬ 재벌특혜 시내면세점 제도 개선(관세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내면세점 선정방식 가격경쟁(경매제도) 방식으로 개선 : 사업자 선정방식 특허수수료 최저입찰가격 하한선 설정 뒤, 가격 경쟁 통한 최고가 입찰자 낙찰 방식</li> <li>- 별도의 재무제표 공시 : 면세점 사업 부문 별도의 재무제표 공시</li> </ul>	
⑭ 생활가능한 수준의 최저임금 달성(최저임금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한선 법제화</li> <li>-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선출 노사가 동의하는 위원으로 구성</li> </ul>	
⑮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법인세 인상(법인세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세법 개정을 통한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을 통한 최고세율 27% 인상</li> <li>- 과세표준 200억초과 5000억원 이하는 최고세율 25%, 5000억 초과에 대해서는 구간 신설 27%로 적용</li> </ul>	
⑯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및 인상을 상한제 도입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안정적인 거주기간과 급격한 주거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입법과제명 (법안명)	개선방안
⑯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및 인상을 상한제 도입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및 인상을 상한제를 도입. 집주인은 세입자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한 최초 임대차 계약 후 2회까지, 최소 6년간 임대차기간을 보장. 또한 계약 갱신 시 5% 범위 내에서만 전세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상한을 정함.
⑰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건강보험법 개정)	- 자격구분을 폐지하고, 소득에 보험료 부과
⑱ GMO 완전표시제 도입 (식품위생법·건강식품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MO를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GMO가 포함된 식품임을 표시토록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개정.</li> <li>- GMO DNA 또는 단백질 잔존에 따라 표시하게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사용된 원재료를 기준으로 GMO 식품여부를 표시토록 해야함.</li> </ul>

대한민국은 헌정 사상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다.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로 민생경제는 파탄나고, 가계부채 증가, 경기침체 등으로 장기적인 전망도 밝지 않다. 새해 벽두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 농수축산물, 기름, 공산품에 이르는 물가 폭등에 시름하면서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다.

국회는 이렇게 파탄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우리사회의 미래비전을 새롭게 확립해야 할 책임이 크다. 특히 국민들의 개혁요구가 거센 3월 임시국회는 국가개혁의 절호의 기회다. 정치권은 대선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 요구를 수렴하는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 ☺☺☺



# 逐鹿者不見山(축록자불견산), 정략적 개헌논의를 경계한다!

김삼수 정치사법팀장  
peace@ccej.or.kr



2017년 1월 5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의 활동이 본격화 됐다. 국회에 개헌특위가 설치돼 개헌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1987년 이후 30년 만이다. 개헌특위는 △입법·집행부 권력구조 및 개헌 절차, △법원·헌재 권력구조 및 정당·선거제도, △기본권 및 통일·경제, ▷지방분권 및 재정 등 크게 4개 소위로 나눠 진행된다. 주지하다시피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오남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발한 개헌 논의는 권력구조 개편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민주주의를 확대·강화하는 방향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개헌 논의는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는 국가 우위적인 관점이 아닌 국민이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국민 우위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공공성과 사회적 이익의 영역에서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국가 우위적 관점이 아닌 국민 우위적 관점으로

개헌은 △국가권력구조, △경제정의, △지방분권, △기본권, △국민참여 등의 방향에서 논의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장하는 개헌이 모색되어야 한다. 아울러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위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정경유착과 재벌구조를 혁파할 수 있는 개헌이 필요하다.

시대적 상황에 대한 고민을 통해 장래에 지향해야 할 가치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현대복지국가와 디아스포라 등 통일헌법 이후 문제는 물론 경제, 재정세제, 인권, 생태·환경, 지방분권 등이 포함돼야 한다. 구체적으로 총강의 경우 영토를 한반도를 넘어 독도, 간도 등에 대한 논의도 가능하도록 하고, 기본권은 소극적 자유를 누리는 차원에서 벗어나 적극적 자유를 누리는 차원에서 기본권 논의가 필요하다.

시민들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권력구조는 국가시스템에서 예산권과 인사권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국민들이 주도권을 갖는 권력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집권자의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과 그 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방향에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의 헌법개정 제안권을 삭제하고, 국민들의 헌법개정발안권을 포함하여 국민주권을 복원해야 한다. 상위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을 남발하거나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한 정부입법권 등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고, 대통령의 대법원장, 검찰총장 등 권력기관 임명권을 폐지하고 선출제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대법원장의 대법관에 대한 임명제청권도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 국민들이 주도권 갖는 권력구조로 전환해 국가권력의 오남용 차단해야

경제조항은 넓은 의미의 지속가능성을 헌법 정신에 부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넓은 의미의 지속가능성이란 대기업 중심 구조를 탈피하고, 생태보존뿐만 아니라 세대간, 지역간, 대·중소기업간 조화롭고 균형 있는 발전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모하는 것이다. 고용문제와 관련해 근로의 의무뿐만 아니라 근로의 권리도 중요한 만큼 국가가 보장해주는 정부 책임성을 명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공공재 등이 국

가권력에 의해 사유화되고, 국가 독점이 용인될 경우 국민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사익을 위해 국가권력이 남용·오용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재정세제는 제헌헌법에서는 재정부분이 따로 분리되었으나, 현재는 납세의무와 조세법률주의 외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 공평과세와 소득재분배 등 조세와 관련된 정의 규정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고, 거둔 세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국민들이 직접 파악할 수 있도록 주민소송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결합해야 한다.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데도 국민이나 지방 등 다른 행위자까지 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이러한 국가독점구조를 깨야 한다. 즉, 입법·행정·사법 등 권력배분에 있어 각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배분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직적 권력구조를 수평적으로 바꾸는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관한 장을 신설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무엇보다 ‘법령’에 의한 자치권이 아니라 ‘법률’에 의한 자치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민 헌법개정발안권과 함께 국회의원을 일정한 요건 하에 소환하여 자격을 박탈하는 국민소환제와 국회의 결정에 대한 국민의 비토권을 인정하는 국민투표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시민참여 없는 개헌, 권력구조에만 집중하는 개헌은 국민적 지탄 피하기 어려워**

국회 개헌특위는 조기 대선 전에 개헌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개헌의 토대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개헌 논의는 위험하다. 남송(南宋) 허당록(虛堂錄)에 죽목자불견산(逐鹿者不見山) ‘사슴을 쫓는 자는 산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거대 담론에 메이면 세부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정치적·정략적 판단에 의해 시민참여 없는 개헌, 권력구조에만 집중하는 개헌이 이루어질 경우 국민의 지탄을 피하기 어렵다.

개헌의 시기와 방식을 둘러싼 이견이 많은 만큼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개헌이 시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만 반영하고, 개헌 논의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과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헌법개정할 수 있도록 헌법개정절차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

# 차별적 건강보험료, 이제는 개편하자!

남은경 사회정책팀장  
nari@ccej.or.kr

정부는 지난달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 부과 비중을 낮추고 점진적으로 소득비중을 높이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고소득자의 반발을 의식해 중단한 정책을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다. 그러나 야당의 소득중심 법안에도 못 미치고, 2년이나 늦춰진 개편 시계를 다시 6년 후로 미루고 있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고통을 줄이려는 정부의 의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 개편안은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과 재정손실을 최소화하려다보니 상대적으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비중은 크게 줄지 않았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성·연령 보험료는 폐지됐지만 최저보험료가 신설됐고, 자동차와 거주용 주택에 부과한 보험료 감소폭은 미미하다. 고소득자 중심의 개선방안이다. 재정 때문에 당분간 지역가입자의 불공평한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낮은 소득과약률과 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점진적 추진을 주장하지만, 제대로 소득을 파악해 보험료를 부과할 의지가 없는 모양이다. 소득과약률 문제는 지역가입자에게 국한됐다가보다는 불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느슨한 과세 체계 때문이다. 점진적 개편은 오히려 더 큰 저항과 반발을 불러와, 2~3단계의 실현가능성도 불투명해 질 수 있다.

정부가 우선 3단계안을 일괄추진하고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면, 소득과약률 문제도 해소하면서 고액 자산가들의 불로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가능해질 것이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연 1500만원 근로소득에는 철저히 보험료를 부과하면서 고액 재산에서 실현된 불로소득 2000만원에 보험료를 즉각 부과하지 못한다면 건강보험부과체계의 형평성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어렵다.

지난해 기준, 낮은 소득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해 건강보험 혜택이 중단될 위기에 놓인 가구가 120만 세대에 육박한다. 소득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는 고통 받는 서민이어야 한다. 국회는 지체 없이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한 건강보험법을 개정하자. 건강보험료 부과 현황 및 가입자별 부과 문제점을 살펴보자.

(1) 가입자 차별하는 보험료 부과 방식

- 2016년 6월 현재, 건강보험가입자는 총 5062만명이며, 이 중 지역가입자는 1398만명(28%)이다. 직장가입자는 전체 72%인 3663만명이며, 이 중 41%인 2천만명이 피부양자이다.
- 현행 건강보험은 가입자 별로 보험료 부과요소와 기준이 다르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경제활동 점수를 소득으로 환산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특히 연소득 500만원 이하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성·연령·자동차에 부과하고 자동차와 재산에는 중복 부과한다. 직장가입자는 근로 이외 종합소득에는 합산액이 7200만 원 초과해야 보험료를 부과하고, 피부양자는 아래 자격기준만 충족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가입자별 보험료 부과요소〉

가입자 구분		성.연령	자동차	재산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지역	500만원* 이하	○	○(중복)	○(중복)	○	○	○	○
	500만원 초과	x	○	○	○	○	○	○
직장	근로자	x	x	x	△(합계 연 7,200만원 초과 시 부과)			○
	피부양자**	x	x	△	△	△	△	△

\* 연소득 기준

\*\* 선정 기준 : 배당·이자소득 4천만원 이하 or 연금소득 4천만원 이하 or 기타·근로소득 4천만원 이하 or 재산 9억원 이하 or 사업자등록 or 사업소득 500만원 초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취득 자료 재정리>

(2) 월 연금소득 200만원에 보험료는 '0원' ; 피부양자 보험료 무임승차

- 사회보험에서 보험료는 능력에 따라 부과해야하며, 능력은 소득을 의미한다. 직장가입

자의 피부양자제도는 무소득 배우자나 부모, 미성년 자녀에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위한 것이나 실상은 고액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부모들이 성인 자녀의 피부양자 자격을 획득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이는 느슨한 피부양자 선정 기준 때문이다.

- 공적연금소득이 있지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 월 300만원 이상 고액 연금 수급자는 3만여 명이다. 월 200만원 이상자도 14만 5천명에 육박하는데 이들 모두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자다.

(단위: 천명)

구분	연금급여(월)	전체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우체국 연금
피부양자	계	1,713,754	1,484,413	179,996	25,926	22,490	929
	1~50만원미만	1,272,342	1,271,744	357	122	117	2
	50~100만원 미만	186,418	183,523	2,303	136	450	6
	100~150만원 미만	56,852	29,088	23,588	1,725	2,203	248
	150~200만원 미만	53,334	58	42,077	7,799	3,047	353
	200~250만원 미만	60,598	-	48,662	5,573	6,121	242
	250~300만원 미만	53,359	-	41,077	6,822	5,382	78
	300만원 이상	30,851	-	21,932	3,749	5,170	-

(3) 소득 없어 보험료 못 낸다 ; 체납가구 88%는 저소득층

- 지역가입자에게는 낮은 소득에도 성·연령, 자동차·주택에 보험료를 부과해 장기체납자가 양산된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세대가 135만 가구를 넘어섰다.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되는데, 약 2백만 명이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체납 가구의 88%는 저소득 가구로 180만 명에 육박한다.
- 저소득층 보험료를 분석하면, 95%는 성·연령·전월세·자동차에 부과됐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부과요별 보험료 부과 현황〉

구분	연소득 500만원 이하*		송파세모녀(사례)		
	비율(%)	보험료(월/억원)	비율(%)	보험료(월/원)	
계	100%	3,084	100%	48,990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동참가율 (평가소득)	소계	52%	1,599	74%	36,359
	성.연령	21%	655	53%	25,834
	소득	5%	152		
	재산	13%	409	21%	10,525
	자동차	12%	383		
과세소득	0%	0			
재산	소계	43%	1,325	26%	12,630
	과표재산	37%	1,134	26%	12,630
	전월세	6%	191		
자동차	5%	159			

\*지역가입자 중 연소득 500만원 이하(건보공단 제공자료\_2016년 6월 기준)

(4) 우병우 전수석 4700만원 금융소득에 보험료 '0원' ; 불로소득에 보험료 감면

- 직장가입자 중 근로소득 이 외의 금융·임대·기타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222만 명이다. 이 중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인 7200만원을 초과해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하는 인원은 3.8만명(1.7%)에 불과했다. 근로 외 소득이 연 7천만원 초과하지만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소득자도 6,593명 이었다.

〈직장가입자 근로 외 소득 보험료 부과 현황〉

2016년 6월 말 기준

근로 외 소득 규모	인원(명)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현황
소 계	2,222,618	
1만원 초과~1천만원 이하	1,514,426	미부과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	255,004	
2천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408,834	
7천만원 초과~7천2백만원 이하	6,593	
7천2백만원 초과	37,761	부과

자료 : 국회(건보공단 제공), 소득 구간별 분포자료 참조

- 지역가입자는 성·연령·자동차 및 주택과 종합소득(금융, 사업, 연금, 기타)에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직장가입자는 주로 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보수월액)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 이외 소득에는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 보험료를 부과(소득월액)하는데, 기준이 높아 사실상 보험료 면제혜택을 주고 있다.
- 경실련이 청와대 수석 및 부처 장관 36명 고위공직자의 건강보험료를 추정했다. 조사 공직자 절반 이상(20명)이 근로소득 외 연간 5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모두 소득월액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됐다.
- 아래 표에 나타난 것처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근로소득 외에 27억 상당의 예금 및 해외채권을 보유. 연 약 4700만원의 이자소득이 추정된다. 그러나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7200만원) 미만이므로 보험료는 미부과된다. 이원종 전 청와대비서실장은 강남구 소재 상가와 송파구 소재 근린생활시설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소득과 예금 이자소득이 약 4,000만원으로 추정되지만 소득월액 보험료 면제대상이다.

〈고위공직자 근로소득 외 소득 추정 상위 5위 건강보험료 부과 현황〉

단위 : 천원

부서	이름	직위	건강보험료			
			이자/임대소득	근로소득	재산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16,817	면제 (연 합산 7,200만원 이하)	부과 (근로소득의 3.26%)	미부과
	이원종	(전)비서실장	40,360			
	우병우	(전)민정수석비서관	47,012			
정 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7,682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17,999			

자료 : 2016년 3월, 공직자 재산 및 소득 공개 기준, 전체명단 분석자료 참조.

- 2016년 최저임금 근로자의 연봉은 1,512만원(시급 6,030원, 주 40시간 기준)이며, 이들의 월 보험료는 41,000원(소득의 3.26%)이다. 그런데 우병우 전 수석의 월 추정 보험료는 36.9만원(연소득은 1억8천2백만원)으로 소득의 2.4%이다. 소득보다 낮은 비율의

보험료를 내고 있어 소득역진현상이 나타난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연봉보다 높고, 고액 재산에서 실현된 불로소득에 보험료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 뿐 만 아니라 사회정의에도 어긋난다.

- 가입자 구분에 따른 차별적 건보부과체계는 고소득자의 보험료 면제(피부양자 무임승차와 소득월액 보험료 면제) 부분을 소득 낮은 지역가입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소득 보험료를 정상화하면, 송파세모녀와 같은 저소득 가구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며 경감할 수 있다. 이제 국회 결정만 남았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청와대가 중단한 소득중심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안이 제대로 처리되는지 끝까지 지켜보자. ☺☺☺



# 정경유착의 주범 전경련은 해체되어야만 한다!

정택수 경제정책팀 간사  
wildwyde@ccej.or.kr

전경련은 그동안 각종 정경유착·정치개입 사건을 주도하며 사회질서를 어지럽혀왔다. 지난해에는 전경련이 어버이연합 우회지원과 미르·K스포츠 재단 사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분노가 절정에 달했다. 전경련이 또 다시 정경유착 저지른 사실은 그간의 과오에 대해 아무 반성도 없었음을 반증한다. 이에 광장에 모인 시민들도 전경련 해체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경제·경영전문가 312인이 '전경련 해체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날로 악화되는 국민여론으로 인해 주요 회원사들마저 회원탈퇴나 활동중단을 선언하였다. 전경련은 더 이상의 존재가치를 상실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해체 요구가 거세짐에 따라 전경련은 쇠신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전경련 쇠신논의는 어제 오늘의 것이 아니다. 전경련은 정경유착 사건이 적발될 때마다 사과와 쇠신약속을 거듭해왔다. 노태우 비자금 사건(1995) 이후 <기업윤리현장>을 선포하였으며, 세풍사건(1997)과 차떼기 사건(2002) 이후 손길승 당시 전경련 회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였다. 기업별 로비대상 정치인 할당 사건(2011) 이후에는

<표1> 전경련 관련 정경유착·정치개입사건 일지

연도	사건명
1988년	일해재단 자금 모금
1995년	노태우 전대통령 대선비자금제공 사건
1997년	불법대선자금 세풍 사건
2002년	불법대선자금 차떼기 사건
2011년	기업별 로비대상 정치인 할당 문건 사건
2012년	국회의원 자녀 대상 캠프 추진
2016년	어버이연합 자금 우회지원
2016년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
2017년	보수단체 지원 추가 의혹 제기 중

허창수 회장이 직접 사과에 나서면서 민간 싱크탱크로의 변신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경련은 현정 이래 최악의 사건으로 손꼽히는 국정농단사태에서마저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사과와 쇠신약속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전경련은 정경유착 근절, 전경련 투명성 강화, 싱크탱크 기능 강화 등을 3대 혁신방안으로 발표하였으며, 윤중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대표적인 친기업 인사들을 혁신위원회의 외부 인사로 영입했다. 이어진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경련 쇠신안은 싱크탱크

중심의 민간경제외교단체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경련의 정경유착 행위는 수차례의 사과와 쇄신약속에도 반복되어온 고착화된 악습으로 해체를 전제하지 않고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 뼈를 깎는 의지를 보여도 모자란 판국에 원래 있던 싱크탱크, 민간경제외교단체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아무 쇄신도 안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심지어 혁신위원회를 친기업 인

사들로 채운 것은 이러한 생각을 더욱 확증시킨다. 아무리 전경련이 외형을 바꾼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조직의 변화가 없다면 정경유착은 언제든 다양한 방법으로 재발하고 말 것이다. 전경련이 내세우는 민간경제외교단체 기능은 현재에도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가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이들이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다.

민법 제38조에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

〈표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경련 해체촉구 운동경과

연도	일시	활동내용
2016	10. 19	전경련 해체 촉구 전문가 312명 공동 기자회견 개최
	10. 26	삼성, 현대차, LG, SK, 롯데, 한화 등 6개 재벌그룹 대상 전경련 해체공개질의서 발송
	11. 07	전경련 해체 공개질의 결과 발표 및 2차 공개질의서 발송 - 6개그룹 모두 미응답
	11. 15	전경련 해체 2차 공개질의결과 발표 - 6개그룹 모두 미응답
2017	01. 11	전경련 30대 재벌 회원사 회원탈퇴 및 탈퇴시점 공개질의서 발송 - (대상) 삼성, SK, 현대차, CJ, GS, KCC, LS, OCI, 금호아시아나, 교보, 대림, 동국제강, 동부, 두산, 롯데, 미래에셋, 부영, 신세계, 영풍, 코오롱, 한국타이어, 한국투자금융지주, 현대, 현대중공업, 현대백화점, 한라, 한진, 한진중공업, 한화, 효성 등 총 30개 기업
	02. 01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18개 개혁입법과제'로 '전경련 해산 촉구 결의안' 제시
	02. 02	국회의 전경련해산촉구결의안 처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회의원 300인 에게 발송
	02. 06	전경련 보수단체 지원에 대한 성명서 발표
	02. 07	산자부의 전경련 설립허가 취소 촉구 기자회견 개최
	02. 08	원내 5개 정당에 전경련 해체 정견 공개질의 발송
	02. 14	원내 5개 정당에 전경련 해체 정견 공개질의 결과 발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 즉각 해체 자유한국당 : 해체 동의하나, 싱크탱크로 전환 바른정당 : 무응답
	02. 15	전경련 30대 회원사 공개질의 결과 및 현대차·SK의 회원탈퇴 약속 미이행에 대한 입장 발표 공개질의 결과 : OCI그룹 탈퇴선언
	02. 16	대선주자 8인에 전경련 해체에 대한 공식입장 질의서 발송
	02. 20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에 「전경련 해산 촉구 결의안」 처리 촉구 입장발표
	02. 22	전경련 해체에 대한 대선주자 공개질의 결과 및 전경련 거짓쇄신 사례 발표 기자회견

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전경련은 정관 제1조에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 구현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 촉진"을 설립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전경련이 창립목적에 위배하여 정권과 유착한 결과 사회질서가 어지럽혀졌을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의 발전도 크게 저해된 것을 감안하면 정부가 폐쇄조치를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전경련 주무관청인 산자부는 전경련의 해체는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해체조치 이전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경련 운영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오로지 전경련 자신과 회원사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전경련에 회원사가 내는 회비는 법인세법에 따라 손비로 인정받는다. 즉, 전경련 회원사들은 원래 세금으로 낼 비용을 회비를 손비처리 함으로써 세금혜택을 받는 것이다. 회비에 세금감면 혜택이 있다는 것은 전경련 운영비에 국민세금이 지원된다는 의미나 다름없다. 이 같은 국민세금 지원에도 전경련은 수차례 정경유착 행위로서 경제질서를 어지럽혀왔으며, 이번 특검수사 결과에도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은 자

금과 자체 자금을 합하여 수십억 원을 보수단체에 지원한 것이 드러났다. 이제 정부는 전경련이 공익에 위배되는 조직임을 직시하고 해체절차에 나서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체 결의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정경유착 근절에 나서야 하는 본연의 임무를 잊지 말고, 3월 임시국회 내에 전경련 해체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또한 검찰 수사를 통해 전경련의 국정농단 및 보수단체 지원 등에 대한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정경유착은 재벌에게로 경제력을 집중시키고 양극화를 심화시켜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을 가로막는다. 양극화 및 불평등의 해소와 경제민주화 실현이 중대한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는 지금, 정경유착 부패의 주범인 전경련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 전경련 해체를 통해 경제정의 실현을 앞당기고 우리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여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우리사회의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



# 박근혜 - 최순실의 꿀단지 국고로 환수하라

—국정농단의 잔재 미르·K스포츠 재단 청산절차 착수

최예지 경제정책팀 간사  
cyj@ccej.or.kr

미르·K스포츠 재단은 시작부터 잘못됐다. 재단 설립의 기획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직접 했고, 안중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직접 재벌들에게 돈을 건으러 다녔다. 그 후 재벌은 출연금을 내고 재단설립에 참여했고, 재벌의 경영권 승계, 사업권 획득 등 민원 해결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검 수사결과도 미르·K스포츠 재단은 뇌물로 설립됐다고 인정했다. 결국 미르·K스포츠 재단은 뇌물을 대신 받아 보관하는 그들만의 꿀단지다.



출처:연합뉴스 TV

774억원 중 620억원(80%)의 막대한 자금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운영재산으로 배정하는 기형적 자금관리구조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 재단의 경우 기본재산이 90% 운영재산이 10%로 편재되어 있지만 미르·K스포츠 재단은 그 반대다. 결국, 재벌들이 뇌물로 바친 미르·K스포츠의 출연금은 자유롭게 인출해서 쓸 수 있는 눈먼 돈인 셈이다. 경실련이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의 자료를 토대로 아무 사업을 하지 않아도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만 추정할 결과 두 재단 합쳐 월간 약 2억원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관리 운영실태에 대해서 관리감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수방관 손을 놓고 있었다. 형법상 처벌이 확정되면 움직이겠다고 늑

장을 부렸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1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수수방관의 태도인 문체부를 강력 규탄했고, 미르·K스포츠재단은 이미 검찰수사에서 재벌들의 설립자금 출연과 권력자의 특혜적 민원 해결을 맞교환한 불법적 거래의 산물로 설립되었음이 명백히 드러났으며 이는 <민법> 제3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즉각 해산 절차에 돌입하고 불법으로 모금된 재산은 국가에 귀속시키길 촉구했다. 또한 관련 국가 예산이 들어간 사업은 모두 중단을 촉구 했고, 두 재단 자체 사업도 모두 멈춰주길 요구했다.

이후 문체부는 3월 7일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히고 있다. 청산 절차가 지체된 점이 상당히 아쉽다. 지체되는 동안 국고로 환수되어야 할 재단의 재산은 계속 사용되었다. 지금이라도 문체부는 청산절차를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

### 미르·K스포츠 재단 재산 전액 국고로 환수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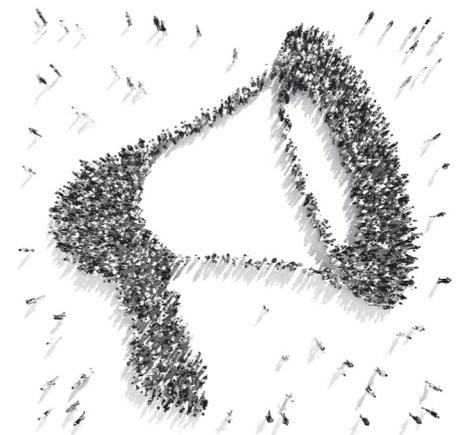
박근혜-최순실은 대통령 퇴임 이후를 위해 미르·K스포츠 재단을 만들어 재벌의 뇌물로 꿀단지를 만들었다. 퇴임 이후 달달한 상상을 했겠지만 한낱 꿈으로 돌아갔다. 미르·K스포츠 재단은 국정농단 사태의 잔재다. 이 재단의 청산은 국정농단의 적폐를 들어내는 시작점이다. 특히, 미르·K스포츠 재단은 뇌물이기 때문에 미르·K스포츠 재단의 재산 전부는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미르·K스포츠 재단의 설립의 과정을 보면 '권력자가 뇌물을 지능적이고 교묘하게 받기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 하루하



▲ 지난 1월 12일 경실련 강당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허가 취소하고 재단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시키길 촉구하고 있다.

루 최선을 다해 살아내고 있는 국민으로서 씁쓸함만 느껴진다. 국민의 심리적 보상과 국정농단의 잔재를 걷어 내기 위해서 미르·K스포츠 재단은 어떠한 자비도 없이 뿌리까지 뽑아내야 한다. 조속히 재단을 청산하고 국고로 환수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올바르게 갈 수 있는 시작이고,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다. ☹️



전체 재산의 80%인 620억원, 자유롭게 인출 가능

운영 실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전체 기금

# 임대주택 실적 부풀리기, 참 쉽죠?

최승섭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  
sub@ccej.or.kr

‘2016년 공공임대주택 12만 호 역대 최다(多) 공급’. 올해 초, 정부가 자랑스럽게 발표한 보도 자료 제목이다. “준공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의 공급 물량”이라며,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경실련이 그 내역을 분석한 결과, 실제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은 40%에 불과해 70%내외였던 이전 정부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실적 확대에 급급해 전세임대, 10년 후 분양임대 등 단기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한 결과이다.

## 역대 최대라던 지난해 임대주택 공급, 실적 부풀리기 위한 단기임대주택 증가가 대다수

연도별 임대주택 종류별 공급현황(준공기준)을 비교한 결과 박근혜 정부 이후 단기임대주택이 급격히 증가했다. 단기임대는 ‘의무임대기간 이후 분양전환’되는 10년임대와 ‘세입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고 공공이 집주인과 전세 계약 후 재임대’하는 전세임대가 있다.

10년 임대는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

주택으로, 국민임대(30년)에 비해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비싸다. 공공이 임대주택을 장기적으로 소유하고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다. 오히려 특정 임대주택 기업들에게 저렴하게 토지를 넘겨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이용되어 왔다. 전세임대는 전세금 지원 대책의 일종으로 단기간에 실적을 쌓기 가장 쉬운 정책이다. 박근혜 정부도 이를 노리고 실적 확대를 위해 전세임대주택을 대폭 늘리고 있다.

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지원금액 한도 이내의 주택을 찾기가 쉽지 않은 데다 집주인의 동의를 얻기도 어렵다. 8,500만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은 입주자 부담인데 저소득층이 이를 스스로 충당하긴 어려워 ‘빚 좋은 개살구’로 비판받아 왔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수도권 하위 20% 평균 전세 값은 1.3억원, 중위 전세는 2.5억원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변두리 주택이나 반지하, 옥탑방, 재건축 직전의 노후주택이나 가능한 가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전 연 7천호에 불과하던 전세임대주택은 지난해 4.3만호로 증가했다. 연평균을 비교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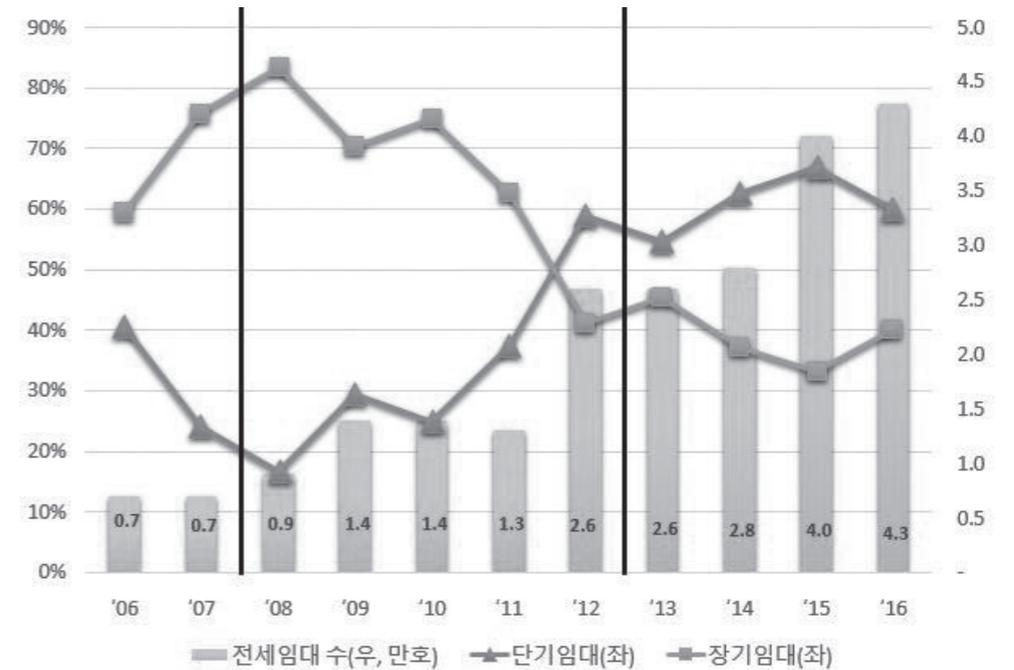
전세임대는 현실성도 떨어진다. 전세보증금 지원액이 수도권 8500만원, 광역시 6500만원, 기타 5500만원에 불과하다. 보증금의 95%는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

〈표1〉최근 10년간 임대주택 종류별 공급 현황(준공 기준)

(단위: 만호)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06	'07	평균	'08	'09	'10	'11	'12	평균	'13	'14	'15	'16	평균
장기임대 계	3.8	4.7	4.3	8	7.4	8.1	5.7	2.3	6.3	3.7	3.8	4.1	5	4.1
국민	3	3.9	3.5	5.7	5.7	7	4.8	1.3	4.9	2.3	2.5	2.2	3.1	2.5
영구	-	-	-	-	-	-	-	-	-	0.05	0.2	0.5	0.7	0.4
매입	0.8	0.8	0.8	2.3	1.7	1.1	0.9	1	1.4	1.3	1.1	1.4	1.2	1.3
단기임대 계	2.6	1.5	2.1	1.6	3.1	2.7	3.4	3.3	2.8	4.4	6.4	8.3	7.5	6.6
10년	1.9	0.8	1.4	0.7	1.7	1.3	2.1	0.7	1.3	1.8	3.6	4.3	3.2	3.2
전세	0.7	0.7	0.7	0.9	1.4	1.4	1.3	2.6	1.5	2.6	2.8	4	4.3	3.4
총계	6.4	6.2	6.3	9.6	10.5	10.8	9.1	5.6	9.1	8.1	10.2	12.4	12.5	0.8

자료)국토교통부 정보공개 청구, 노무현정부는 2년치 통계임, 주)정부별 평균은 연평균 수치임, 행복주택은 영구임대주택에 포함시킴



▲ 연도별 장단기 임대주택 비율(%) 변화 및 전세임대 수(만호)

자료)국토교통부 정보공개청구 재가공

면, 노무현정부 7천호, 이명박정부 1.5만호에 불과했으나 현 정부는 3.4만호로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 장기임대주택 비율 40%, 최근 10년간 가장 적어**

이전 정부 평균 연도별 3만호 이하이던 단기임대주택은 박근혜 정부 평균 6.6만호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반해 장기임대는 4.1만호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 평균 6.3만호보다는 2만호 이상 낮은 실적이다.

전체 공공임대주택 중 장기·단기임대주택의 구성비를 보면 더욱 명확하다. 장기임대주택 비율이 박근혜 정부는 40%에 불과해 노무현·이명박 정부의 70%내외보다 훨씬 적다. 장기임대주택은 의무기간이 영구인 영구임대, 50년인 50년임대, 30년인 국민임대와 현 정부가 도입한 행복주택 등이다. 노무현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경우 장기임대와 단기임대 주택의 비율이 7:3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후반기부터 단기임대 비율이 상승하기 시작해 박근혜 정부이후에는 4:6으로 고착화 됐다. 2015년은 67%로 지난 10년간 가장 높았다. 단기간에 실적을 낼 수 있는 단기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임대주택 실적 부풀리기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박근혜 정부의 전월세 악화 방지와 주택거품 조장으로 무주택자들은 유례없는 주거난에 처해 있다. 그러나 정부는 허울뿐이고 실적에 목맨 임대주택 증가를 강조하며 여전히 전월세시장 안정은 '나 몰라라'하고 있다. 올해 이후 입주가 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무책임한 입장이다. 정부는 방관자적 입장을 중단하고 국회에서 논의만 진행중인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등 세입자 안정대책 도입을 결단해야 한다. 숫자에 목맨 단기임대주택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서민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 공급과, 집값 거품 제거에 나서야 할 것이다. ☹☹☹



# 이재용 부회장 구속된 삼성,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이성윤 경제정책팀 간사  
pain2c@ccej.or.kr

지난 1월 19일, 박영수 특검팀이 청구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검찰에 의해 기각되었다. 이러한 검찰의 결정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분노하였다. 하지만 특검은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를 추가하여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였고, 검찰은 이것은 받아들였다. 삼성그룹 총수로서는 역사상 최초로 구속이 결정된 순간이었다.

특검은 삼성이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내고, 정유라씨에게 고급 말을 제공하는 형태로 최순실씨 일가에 뇌물을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하여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하였다. 특히, 경영권 승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은 손실을 감수하며 합병에 찬성했으며, 공정위는 이 과정



▲ 구속된 이재용 부회장

에서 삼성SDI의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주식 매도 규모를 감소시켜주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외에도 공정위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과정에서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밝혀지고 있다.

그동안 삼성은 수많은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법의 처벌을 받지 않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왔다. 하지만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삼성이 더 이상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신호이고, 지금까지 해왔던 불법으로 이어진 세습 경영과 순환출자로 연결된 비정상적인 지배구조를 손봐야한다는 메시지가이기도 하다.

이재용 회장이 구속된 이후, 삼성은 그룹 내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오던 미래전략실의 해체와 함께 그룹차원에서 진행되어오던 모든 활동들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각 계열사의 이사회를 통해 자율경영을 강조하며 변화의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삼성은 과거에도 전략기획실의 해체, 이진희 회장의 경영 은퇴 등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발표도 그저 순간의 위기를 넘기기 위한 수단일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삼성은 삼성생명의 과도한 삼성전자 주식 보유로 인한 금산분리원칙 위배, 총수일가가 소수의 지분으로 그룹지배를 가능하게 한 순환출자 구조, 총수일가에 우호적인 이사회 구조, 선단식 경영 등 해결해야 할 것들은 너무도 많다. 그럼에도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결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도 진정한 변화의 의지를 의심케 만드는 부분이다.

삼성은 이제 과거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국내 최고의 기업이라는 명성에 맞는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여주기식 변화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부당하게 거둔 이득을 사회에 환원하여 진정한 변화의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 이를 통해 삼성이 우리사회의 공정한 경제체제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기업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

〈표1〉 삼성그룹 총수 처벌 결과

삼성그룹 발표내용 (2017.2.28.)	
1. 삼성 미래전략실은 3월 1일부로 해체합니다. 실장 최지성 부회장, 실차장 장충기 사장, 그리고 쏠 팀장은 사임합니다.	
2. 각 회사는 대표이사와 이사회를 중심으로 자율경영을 합니다. 삼성그룹 사장단 회의는 폐지합니다.	
3. 대관업무 조직을 해체합니다.	
4. 외부 출연금, 기부금은 일정기준 이상일 경우 이사회 또는 이사회 산하 위원회의 승인 후 집행합니다.	
5. 박상진 승마협회장은 사임하고 승마협회에 파견된 임직원은 소속사로 복귀합니다.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은 사임합니다.	

# 경기 침체의 범인은 청탁금지법이 아니라 정부다

유애지 정치사법팀 간사  
aejiyu@ccej.or.kr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의 상한액에서 식사비 상한액을 높여 '5·5·10만원'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청탁금지법의 합리적 조정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지시에 따라 상한액에 대한 검토와 조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경기 침체가 청탁금지법 탓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어불성설

정부는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서민 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기준 완화를 강행하고 있지만 어불성설이다. 청탁금지법의 대상은 공직자와 공공성이 강한 민간영역 종사자로 한정되어있다. 다수의 일반 국민과는 무관하다. 특히 현행 식사비 3만원과 선물비 5만원이라는 규정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매우 높은 금액이다.

2016년 10월 청탁금지법 관련 업종 카드승인금액

(단위 : 억원, %)

업종		'15.10월	'16.10월	전년동기대비	
				증감	증감률(%)
일반음식점	개인	61,998	67,993	5,995	9.7
	법인	13,945	13,924	-21	-0.2
	전체	75,943	81,917	5,974	7.9
유흥주점	개인	2,970	2,903	-67	-2.3
	법인	1,005	853	-152	-15.1
	전체	3,975	3,756	-219	-5.5
골프장	개인	2,938	3,144	205	7.0
	법인	1,868	1,720	-147	-7.9
	전체	4,806	4,864	58	1.2

자료) 여신금융연구소

일반 국민들 중 한 끼 식사로 3만원 이상의 식사를 먹거나 접대 받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정부와 상한액 완화를 주장하는 일각에서는 서민 경제 타격을 이유로 들지만 그 대상은 극소수 계층과 일부 고가 음식점 등에 국한된다. 국가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것이라는 정부와 일부 언론의 주장이 국민에게 설득력이 없는 이유다.

실제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급감이 예상됐던 법인카드 사용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법인카드 승인금액은 청탁금지법 시행 직후인 지난 10월 15조 21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5% 증가했고, 11월에도 13조 5600억 원으로 19.2% 늘었다. 특히 일반음식점 법인카드 승인액이 청탁금지법 시행 전인 9월 1조 2800억원에서 10월 1조 3900억원, 11월 1조 4600억원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개인카드 승인 금액 역시 공과금을 제외하고 10월과 11월 각각 6.4%, 15% 늘었다. 개인카드의 일반음식점 승인액은 6조 8000억원과 6조 33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상승했다. 이는 정부가 식사비 상한액을 올려야 하는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수치다. 정부가 고작 몇 달 간의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법을 고치겠다는 것은 심각한 가계부채,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위축 등 경제정책 실패를 청탁금지법 탓으로 호도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청탁금지법은 공직과 공공성이 강한 민간 영역에서 접대와 향응을 통해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왔던 부정부패를 끊어내기 위한 법이다. 우리

보다 경제력이 높은 국가들도 더 엄격한 규제를 통해 부패의 근원이 되는 일상적인 접대와 향응을 방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패인식 점수가 OECD 국가들의 평균인 67점 수준으로 올라가면, 0.65%의 추가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도 이미 나와 있다. 부정부패를 끊어내야만 투명한 경쟁으로 우리 경제도 발전할 수 있다. 일시적인 부작용과 혼란을 이유로 법을 완화하기 시작하면 결국 법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위험성이 높다.

오늘도 경실련에는 한 통의 전화가 왔다. 청탁금지법의 기준을 완화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말도 안 된다며 경실련이 꼭 막아달라는 시민의 전화였다. "밥 3만 원짜리도 부족해서 5만 원짜리 먹게 해달라는 거냐"며 "정부와 정치권, 일부 언론이 일반 시민들과는 상관도 없는 걸 가지고 마치 시민들 생각하는 척 꼼수를 쓴다"고 화도 내셨다. 청탁금지법 완화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경실련에는 이렇듯 성난 시민들의 전화가 이어진다. 최근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뜨거운 상황이다. 국민 대다수는 올 한 해가 부정부패의 악습을 뿌리 뽑고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원년이 되기를 열망하고 있다. 이게 정말 시민들의 뜻이고 목소리라는 것을 정부와 정치권, 일부 언론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

# 도찰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겠다며 사찰을 하려는 정부

- 행정자치부의 「개인영상정보보호법(안)」 제정 반대

박지호 소비자정의센터 간사  
jhpark@ccej.or.kr



▲ 정부의 「개인영상정보보호법(안)」에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에서 원천 금지하고 있는 CCTV의 자유로운 조작과 녹음까지 허용하고 있다.

‘하늘에 드론이 떠다닌다. 저 드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 저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는 무엇을 찍고 있는 걸까.’ 무인비행장치 드론의 보급과 사용이 확대 되면서 공중에 떠 있는 수많은 드론들을 보면 이 같은 생각이 먼저 찾아온다.

앞 유리에 빨간불이 깜빡이고 있는 차량에는 고성능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다. 차량용 블랙박스 보급률은 30%를 넘어섰다. 블랙박스는 도

로 위의 감시자로서 역할까지 하기 시작했다.

기술의 발달과 함께 초경량 휴대용 영상장치들이 늘어났다. 하지만 이러한 영상장치들의 확대는 피해를 동반한다. 가장 큰 피해는 광범위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드론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고층 아파트 일대에서 남의 집을 몰래 촬영하거나, 불특정 다수를 노린 몰카 피해가 속출한다. 블랙박스 역시 촬영된 이의 의사와 상

관없이 관련 영상이 동영상 사이트에서 게시되어 떠돌아다닌다.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작년 12월 CCTV, 블랙박스, 드론 등의 설치 및 운영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 및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법률(안)(이하 「개인영상정보보호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들여다보니 내용이 이상하다. 행자부가 원하는 것이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사생활 침해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것인지 사업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정부에 의한 감시 사회를 이룩하겠다는 것인지 헷갈린다.

실제 사업자들은 「개인영상정보보호법(안)」 제6조에 따라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도 필요 없다. 사업자가 자기 마음대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더라도 제재도 처벌도 없다. 행자부는 이 같은 만능키를 사업자에게 쥐어주면서 해당 조항에서 이야기하는 “정당한 이익”에 대한 정의조차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다. 사업자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관련 조항을 해석하고 악용할 여지가 충분하는데도 정부는 시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망도 치지 않았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통계작성, 학술연구 및 연구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의 취지도 훼손한다.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익명 조치”한 경우 통계 및 연구 등에 활용을 허용한다.

하지만 행자부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를 통해 통계, 연구 목적을 위해서는 익명 조치가 아닌 “비식별 조치”를 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정도면 정부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라는 명령에 사로잡힌 듯하다.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는 국정농단의 주 무대인 청와대에서 찍어내 리기식으로 추진된 빅데이터 산업의 핵심 내용이다. 사회적으로 여러 논란이 계속되고 정보인권단체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계속됐지만 정부는 여전히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

우리의 대화를 엿 들으려는 정부

행자부의 「개인영상정보보호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면서 영상정보처리기를 통한 녹음을 부분적으로 허용했다는 데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 등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에서는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녹음기능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최근에는 비명소리 등 위급상황을 자동 감지하여 관제요원에게 경보음 등의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지능형 CCTV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도입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나 범죄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녹음 허용”

행자부는 위와 같은 취지를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악용의 가능성, 특히 공권력, 사정기관 등이 CCTV 등을 활용하여 무분별하게 시민들의 대화 등을 사찰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대안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미 CCTV 등을 통한 노동자의 노동감시 등이 만연한 시대에 정부는 열어서는 안 될 빗장을 강제로 열려고 한다.

경실련은 이 같은 문제의식을 담은 반대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사실 영상정보처리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보완으로도 충분하다. 어찌면 행자부 혹은 박근혜 정부는 법 제정이라는 실적이 필요했던 것이 아닐까 의구심이 든다.

시민들의 권익을 조금이라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은 시행되어서도 제정되어서도 안 된다. 정부가 시민들의 우려를 귀 담아 듣지 않고 「개인영상정보보호법(안)」 제정을 밀어붙인다면 이는 공권력에 의한 침해, 사업자에 의한 침해를 권장하는 법으로 악용될 수밖에 없어 시민들에게 도리어 피해를 준다.

정부가 해당안을 정부 발의안으로 제정을 추진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 만약 정부가 스리슬쩍 해당 법안의 내용을 고수한다면 촛불을 든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놓은 자유로운 사회를 다시 공권력이 무분별하게 휘둘렀던 과거로 회귀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게 분명하다. 비약 같지만 진실이다. 정부의 선수로 뛰고 있는 행자부는 개인정보 보호 주무부처인데도 이 같은 항당한 법을 만들려고 하니 말이다. ☹☹☹





# 개성공단은 재가동 되어야 한다.

쇄를 통해 우리가 얻는 이익은 거의 없는 반면 우리가 입는 피해는 실로 막대하다. 정부 스스로 제 발에 발등을 찍는 우를 범하였으며,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를 태우는 상황이 되었다.

무엇보다 개성공단은 단순한 경제적 의미를 넘어서 분단으로 인한 아픔을 극복하고, 평화·화해·통일의 상징으로 자리매김 해왔다. 통일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발표 한마디로 문 닫을 수 있는 일개 구멍가게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만약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가동되고, 남북경협이 확대 되었다면 한반도의 긴장 완화는 물론 통일의 문턱에 한걸음 더 다가갔을 것이다. 이제 구호에만 그친 평화·통일이 아니라 실제 남북 화해를 이끌어내고,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에 기반 한 통일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심각한 경제 침체에 놓여있다.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으며 최악의 실업난에 청년들이 신음하고 있다. 백약이 무효한 대한민국 경제 상황 속에서 그 해결책으로 개성공단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하며,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포함한 추가적인 남북경협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막대한 통일의 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도 개성공단 정상화와 남북경협 확대는 중요하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액은 1조 5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중 정부로부터 1/3에 해당하는 4,838억원의 금액만이 지원되었을 뿐 나머지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입주기업들의 몫으로 떠넘겨 버렸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는 무책임하게 상황을 방치하고 있으며 향후 있을 개성공단의 재가동에 대한 준비나 고민이 전혀 없어 보인다. 입주기업에 대한 보상과 지원 없이는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수 없으며, 재가동 되더라도 이후의 남북경협 사업에 기업들의 투자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험 중단에 따른 보상법을 제정하여 입주기업의 피해 보상을 위해 나서야 한다.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는 안정적 성장 기조를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북중 무역 규모가 증가 추세이고, 쌀 생산량·환율 등이 안정세를 찾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기는커

개성공단이 문을 닫은 지 1년이 되었다. 2004년 공단이 첫 가동 된 이래로 여러 부침이 있었지만 개성공단은 남북의 협력과 화해의 상징으로 역할을 해왔다. 정부가 허울뿐인 대북제재에 매달려 개성공단을 폐쇄시키는 동안 남북관계는 파탄의 지경에 놓여버렸고, 개성공단은 북핵·미사일의 자금줄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가동을 멈추었다. 그간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국회, 시민사회, 입주기업 등이 노력을 하였으나 정부는 입주기업의 피해보상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으며,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음을 들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나서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는 개성공단의 이익이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개성공단을 폐쇄하였다. 하지만 개성공단에 대해 조금만 살펴봐도 그 말은 거짓임을 금방 알 수 있다. 2005년 ~ 2013년까지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거둬들인 이익은 3억7천만 달러이다. 하지만 이 중 30%는 사회·문화 시책비로 개성시와 주민들을 위해 나머지 70%는 현물과 현금의 형태로 노동자들에게 지급이 되어 사용되었다. 이를 두고 개성공단이 북핵·미사일의 자금줄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말이다. 또한 북중 교역의 규모가 2015년 한해 57억달러에 달하고 있어 굳이 자금의 출처를 찾는다면 개성공단 보다는 북중 교역이 더 맞을지도 모른다.

정부가 개성공단을 포함한 대북제재에 매달리며 우리가 입는 피해는 실로 막대한 상황이다. 125개 입주기업들과 입주기업들을 지원해 온 영업기업 등은 1조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거나 극심한 경영 위기에 놓이고 말았다. 경영을 이어가는 기업들도 상당수 하청업체로 전락하여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였다. 여기에 5,000여 개 협력업체의 피해 또한 막대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결국 개성공단 폐

조성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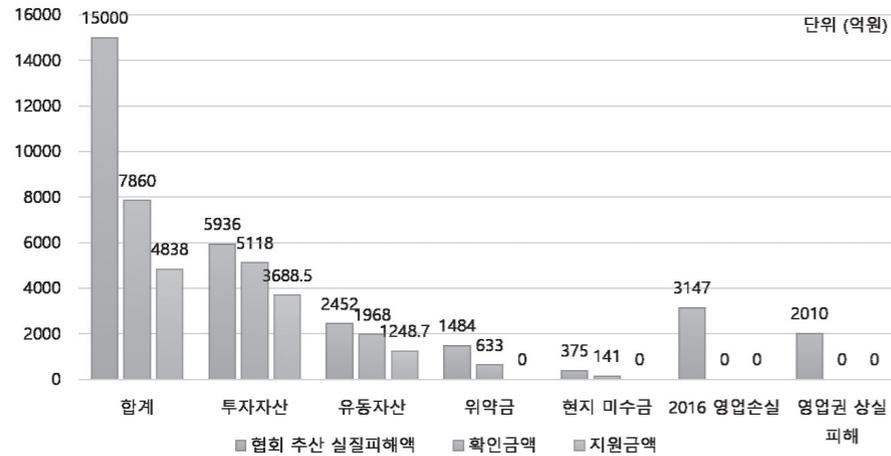
통일협회 간사

reunification@ccej.or.kr

# 부산 송도해상케이블카 복원사업 특혜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배성훈  
부산경실련 예산감사팀장  
plazama@hanmail.net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및 지원액



• 실질피해액은 2016년 영업손실 예상액(47개사 응답), 영업권 상실피해액(36개사 응답) 포함  
• 개성공단기업협회 제공 (2017.01.13 기준)

영 그 능력을 더욱 고도화시키고 있다. 최근 ICBM, 핵실험을 운운하며 한반도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 더불어 북한 경제가 중국으로의 예측이 가속화되고 있다. 언제까지 허울뿐인 대북제재에 매달려 정세판단을 그르칠 것인지 안타까울 뿐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개성공단 정상화는 더욱 요원해지며, 기업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조속히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생존이 달린 시급한 문제이다. ☹☹



부산경실련은 지난 1월 25일(수) 부산 송도해수욕장 앞에서 ‘송도해상케이블카 복원사업 특혜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송도해상케이블카 복원사업의 주무관청인 부산시 서구청을 감사대상으로 한 공익감사청구서는 지난 2월 6일(월) 감사원에 송부되었다.

행정지원과 특혜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법적인 문제는 회피했다라도 해당 사업을 주도했던 퇴직공무원의 재직사항과 과도한 특혜요구에 대한 서구청의 협조사항이 시민들의 공익을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여 본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하였다.

민간제안사업으로 시작된 송도해상케이블카 복원사업은 올해 5월을 완공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에 관여하였던 퇴직공무원이 지난해 11월부터 (주)송도해상케이블카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민간제안사업임에도 사업비 과다소요, 수익성의 부족 등을 이유로 각종

첫 번째로 지적된 송도해상케이블카 복원사업을 주도한 前서구청 안전도시국장이 퇴직 후 해당업체인 (주)송도해상케이블카 사장으로 재직한 것은 전형적인 ‘관피아’의 모습이다.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하여 퇴직 후 2년이 지난 뒤, 해당 업체에 재직하더라도 이는 도덕적 책임을 피할 수





는 없다. 특히 자신이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주요 심의에 참여하고 사업을 주도했던 것을 고려했을 때, 해당 업체의 취업은 퇴직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다.

또한 공직자로 재직할 당시 사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퇴직 후 취업을 보장하는 '시간차 부패'에 해당 될 수 있다는 의혹을 지우기 힘들며, 해당사업과 관련된 고위공직자를 사장으로 임명하여 사업 진행의 편의를 보려는 전형적인 '관피아'의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 퇴직공직자들의 부도덕한 취업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해당업체의 취업이 적절한지, 또한 적법한 심사절차를 거쳤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민간제안으로 시작된 BTO(수익형 민자사업)사업이 '사업비 과다소요', '수익성의 부족' 등의 이유로 각종 행정지원 및 부지의 무

상사용 등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이며, 이를 허용한 부산시 서구청의 행정은 주민의 공익적 가치를 심각히 훼손한 것이다.

(주)송도해상케이블카는 지난 2015년 7월 27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에 보낸 공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민자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 지원"을 요구하였다.

1. 케이블카사업 수익성 부족에 따른 보완 대책
  - 오션파크 부지 무상사용(오토캠핑장 무상 사용 운용)
  - 오션파크 사업 완료 후 10년이 경과하여 매립용도 변경되거나, 그 이전이라도 수익사업이 가능할 경우, 우선 케이블카사업의 민투자와 협의할 수 있는 방안 보장
  - 상·하부 정류장주변 주차장 무상사용
  - 남항대교 하부, 한진매립지 북측 노점상 철거 구역, 암남공원 주차장, 사업지 주변 이면도로 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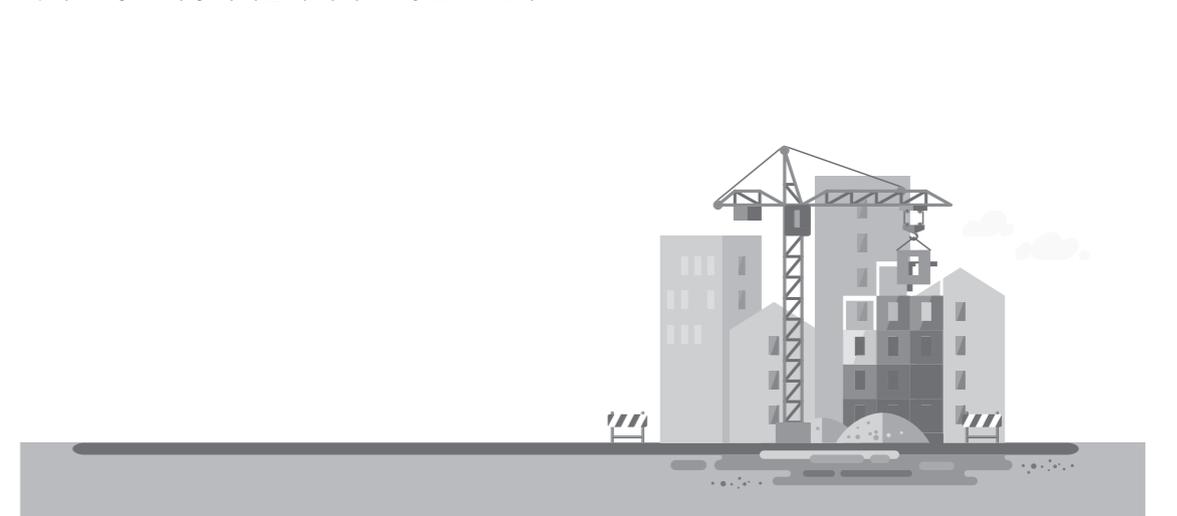
2. 케이블카사업의 중·장기적 활성화 대책 (이용객의 지속적인 유지)
  - 암남공원, 송림공원의 정비, 개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동물검역원 이전 시 케이블카와 연계한 관광·상업시설 설치에 필요한 행정조치 및 부지매입 협조(부산시 계획에 반영)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 사용·수익허가기간) 개정에 따라 운영개시 20년 후 민자투자자가 케이블카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방안 보장
  - 20년 이후 민투자가 무상으로 계속 사용하거나,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최대한 감면 방안 보장(행정재산임을 감안하여 공물법의 규정에 따른 최소사용료 적용)

이에 부산광역시 서구는 '케이블카 사업을 포함한 모든 행정업무에 대하여 지원가능 범위내에서 적극 지원코자'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특히 (주)송도해상케이블카에서 요청한 오션파크

부지 및 공영주차장 등의 사용에 대해서는 무상 또는 매우 낮은 사용료를 책정하여 제공하였다.

송도해상케이블카의 운영방안 등에 대한 사항은 민간사업자인 (주)송도해상케이블카에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들의 사업영위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요구이다. 또한 이를 적극 허용하고자 하는 서구청의 행정은 시민들의 공익을 대변한다고 보기 어렵다.

부산경실련은 퇴직공직자의 부도덕한 취업과 부산광역시 서구청의 행정지원이 시민들의 공익적 가치를 심각히 훼손하였고, 특정기업의 사업영위를 위해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서구청이 제공한 특혜성 지원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며 이번 공익감사를 통해 시민들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고, 서구청이 시민을 위한 행정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 윤순철 신임 사무총장 인터뷰

정리 : 회원홍보팀



**Q. 경실련 제12대 사무총장이 되신 각오와 다짐은?**

**A.**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시기에 사무총장이란 중책을 맡아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경실련은 시민들과 호흡하는 조직으로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시민들의 의사를 적극 대변하고 내부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시민운동을 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경실련이 소수 전문가나 상근활동가의 일터를 넘어서 시민과 회원의 조직으로 거듭나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나의 중요한 과제라 생각한다.

**Q. 역대 총장들과 본인의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A.** 그동안 전임 8명의 사무총장들은 모두 각기 다른 장점으로 가지고 특색있는 시민운동을 했다고 생각한다. 나는 경실련에서 아파트값거품 빼기운동, 철도민영화 반대운동, 민간투자사업 특혜 청산운동 그리고 최근 전경련 해체와 같은 운동을 주도하였는데 이슈를 선정하면 집중하는 방식을 선호하였다. 선배들로부터 성격적으로 고집이 세고 집요하다는 평을 듣는 데

나의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활동 방식, 시민들과 민생안정을 위한 의제를 선택하여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방식의 운동을 하게 될 것 같다.

**Q. 시민운동을 시작한 계기와 경실련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A.** 학생운동과 노동현장을 경험하였다. 그 당시 새로운 운동을 모색하면서 전문적 운동가가 되는 것과 생활비를 주는 곳에서 활동을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1994년 당시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곳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었다. 특히 단체 명칭에 경제정의라는 뚜렷한 사명을 제시하고 있어 마음에 들었고, 시민운동이란 새로운 방식이 매력적이었다. 그러나 경실련과 첫 인연은 술이 매개가 되어 연결되었다.

**Q.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 3권정도, 월간경실련 독자들에게 추천해준다면?**

**A.** 나의 독서 습관은 해당 시기에 나에게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책을 보는 편이다. 그래서 교양서적이거나 문학, 인문학 분야의 책은 많이 읽지 못했다.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책을 추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굳이 공개한다면 책을 읽고 나서 오래도록 생각하게 하는 책들은 성경, 소설 대망(아마오카 소하치의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리고 삼국지 정도이다.

**Q. 지금의 윤순철 총장이 있기까지 가장 큰 영향 준 사람은 누구인가?**

**A.** 물론 첫째는 부모님이다. 경실련에서는 너무 많아서 특정하기가 어렵다. 경실련에서 시민운동을 알게 되었고 배웠으며 나만의 시민운동을

개척하였다. 그래서 경실련에서 만나 같이 활동했던 상근활동가나 전문가 발런티어 그리고 회원 분들 모두가 나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항상 고마운 분들이었고 소중했다.

**Q. 28주년을 맞는 경실련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내부적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A.** 경실련이 어느덧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지속가능성을 염려할 만큼 허약한 것도 사실이다. 시민운동단체인 경실련은 시대적 요구에 항상적으로 응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모든 조직이 그렇듯이 경실련도 관성이 있어서 혁신적인 변화나 실패를 두려워한다. 이러한 조직 여건에서는 비효율성이 증가되는 반면 운동의 창의성이나 독창성은 사라진다. 위험을 감수하려는 운동성도 사라질 것이다. 결국 경실련이 추구하는 경제정의와 사회정의 실현을 통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민주공동체의 비전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조직의 간판만 부동켜안고 있는, 존재이유를 상실한 조직이 될 것이다.

경실련은 30주년을 앞두고 대대적인 변화를 능동적으로 추진해야한다. 우선적으로는 시민사회가 이미 종합형 운동에서 전문분야 운동으로 재편되고 있듯이 경실련도 비전에 걸 맞는 의제를 선택하고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난 30년간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다보니 어느새 비대해지고 형해화된 조직체계와 운영 방식을 대폭 정비하여 슬림화해야 한다. 그리고 전국경실련 조직이 일정한 수준의 운동역량을 갖추고 또는 유지하는 것이 중



요한데 교육과 훈련이 체계화 되어 있지 않고, 각 조직에서 진행된 사업들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편차가 크다. 또한 상근활동가들의 생활이 불안하여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하기 위하여 회원, 전문가자원봉사자, 상근활동가가 참여하는 전국교육대회를 부활시키고, 반복되는 사업들은 매뉴얼화하여 사업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상근활동가들의 안정적 운동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급여의 현실화와 발전기금을 조성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시민의 신문>의 독립화 이후 자체적인 소통수단 갖추지 않았는데 전문화된 SNS 전략이 필요하다. SNS는 지리적 한계를 넘나드는 공간성, 폭넓고 간편한 관계성, 다양한 여론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신속성 등의 특성을 갖는 데 이를 경실련 운동에 반영해야한다.

**Q. 올해는 빠르게 대선을 치르게 될 텐데 경실련은 어떤 대응을 할 계획이신지?**

A. 경실련은 1989년 출범 할 당시에는 공명선거 운동을 주로 하였다. 최근에는 유권자들에게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 즉 후보자들이 내놓는 공약들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현실을 변화시킬 바람직한 미래비전을 담고 있는 지, 국민들이 관심이 있고 시급한 현안 인지 등을 검증하여 유권자들에 제공하고 이를 통해 유권자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최선 또는 차선의 후보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운동을 하였다. 그리고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투표 독려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그런데 올 제19대 대통령선거가 탄핵이라는 정치적으로 특수한 상황에서 치러지다 보니 선거 운동 기간이 짧아지면서 후보자 검증기간도 과

거 보다는 짧아지고, 투표일이 연휴와 붙어 있어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당선자가 정권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바로 직무를 보게 되어 유권자들이 적지 않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활동이 요구되는 데 경실련은 후보자들의 공약검증에 집중하려고 한다. 특히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주제들에 대해서는 후보자들간의 입장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차별화가 가능하도록 검증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물론 젊은이들과 함께 사전투표 참여나 본 선거일 투표의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도 할 예정이다.



**Q. 올해 경실련이 주력하려고 하는 핵심 사업은 무엇인지?**

A. 지금 우리에게 해야 할 일들이 끝없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거나 아쉬움 속에 청와대를 떠난 대통령이 한분도 없었듯이 권력구조 개편을 비롯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헌법 개정이 중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독선과 독단 그리고 공식이 아닌 비선들에 의지한 국정운영 때문에 임기 내내 국민들과 불화하고 냉소 속에서 탄핵을 초래한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의 고리인 정치-경제-언론-사법의 유착을 끊을 제도적 체계를 정비해야한다. 또한 재벌과 대기업의 기득권의 독식과 특혜를 보장하는 경제구조를 해체하고 일자리 불안, 가계부채 폭증, 전월세 대란의 주거불안, 구호뿐인 복지와 취약한 사회 안정망 등 민생을 안정화하는 시급한 일들이 있다.

경실련은 시대적 흐름과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헌법 개정, 재벌개혁이나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경제체제의 개선, 정경유착과 권력형 부패 근절을 위한 권력기관의 개혁, 그리고 주거와 소득, 일자리 등 민생안정을 위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다. 요즘 경실련은 대선 후보들에게 공약을 제안하거나 선거가 끝나면 새 정부에 건의할 개혁과제를 작성하고 있다. 대선 이후 그 과제들 중 핵심적 의제들의 우선순위를 가려 영역중심의 사업방식에서 주제/의제 중심의 활동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

# 안녕하세요! 우리는 경실련 인턴입니다.

정리 : 회원홍보팀



- 성명: 정현석
- 학교/전공: 아주대/이비즈니스학과
- 팀/업무: 정치사법팀/국회의원 발의안 정리 및 대선 프로그램 리서치

안녕하세요 경실련 동계인턴 정현석이라고 합니다. 이번 2월 졸업을 앞두고 평소 관심이 있었던 시민단체, ngo 등으로 진로를 알아보다가 좋은 기회가 생겨 경실련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사법팀에서 국회의원 발의안건을 정리하고 선거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등 간사님을 서포트하는 것입니다. 동계 시즌은 각 팀별로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논의를 할 때인지라 정적인 활동이 많아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달라서 아쉬운 점이 있지만, 순간순간 배운다는 자세로 업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턴 프로젝트입니다. 저를 포함해 6명의 인턴들이 시의성, 참신성, 경실련과의 연관성 등의 기준을 가지고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하여, 인턴 기간 마지막 주에 경실련 간사님들을 상대로 발표를 하는 과제입니다. 저희는 흥미로운 주제인 '기본소득과 한국으로의 적용 가능성'을 선정하여 논의 중에 있습니다. 물론 논의의 시작점에 복지제도, 복지 철학, 세금, 정치 철학 등 워낙 다양하고 깊이 있는 주제들이 섞여 있어 힘든 점이 있지만, 기본소득 논의를 통해 한국 복지제도의 미래를 그려보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턴들과 이러한 기본소득 논의를 좀 더 발전시켜서 청년세대로서 참신한 화두 거리를 경실련과 시민사회에 던져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명: 이서연
- 학교/전공: 성신여자대학교/경영학과
- 팀/업무: 사회정책팀/ 의료보험 부과체계

나를 찾아가기 위해서 다양한 경험과 도전을 해보고 싶어 하는, 도전을 꿈꾸는 대학생입니다. 물론 경제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취약하고 사회, 정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혼란(?) 대학생이기도 합니다.(하하)

그렇기에 경실련에 지원하면서 무모한 결정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부족했던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저는 경실련을 통해서 정말 많은 내용을 배우고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인턴 분들을 만나서 인턴 분들과의 대화, 팀 프로젝트 그리고 국장님 덕분에 저는 부족한 부분을 하나하나씩 채워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시민단체는 사실 중고등학교 사회책에서나 배우는 부분으로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더해서 시민단체의 중요성, 하는 일,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도 못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턴 생활을 통해서 시민단체라는 자체의 중요성, 그리고 경실련의 역할과 그로 인해 발전되고 있는 사회의 모습들 등 많은 부분을 알아갈 수 있었고 지금도 알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얼마나 많은 부분을 놓치고 살아왔고 이러한 부분을 채워나가면서 스스로가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사회정책 팀에서는 1월부터 '의료보험 부과체계' 부분에 대해서 보도 자료와 기사를 준비하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회의 대안 방법에 대해서도 꾸준한 비판과 발전 방향을 생각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고 빠르게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글과 그래프 등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턴 생활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인턴 팀 프로젝트입니다. 인턴들이 일정한 요일 특정 시간마다 모여서 팀 프로젝트 주제를 정하여 이에 대한 회의와 준비를 하는 것에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닫고 느낍니다. 주제가 처음에 어려워서 (사실 벌써 프로젝트를 만나 진행해왔지만 여전히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지만;) 팀원들끼리 난감하고 자료조사에만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 든든한 반장님 덕분에 빠르고 정확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각자 부분별로 나눠 자료를 조사하면서 공유하는 과정 속에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진행하는 회의 시간이 가장 기대되고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뉴스를 통해서 잠깐 관심을 갖고, 눈에 띄는 자극적인 기사에만 눈을 돌리던 과거와 다르게 다양한 뉴스를 찾아보고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지 구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제 모습에 스스로 놀라고 있습니다. 남은 인턴 생활까지 최선을 다하여 마무리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성명 : 배병훈
- 학교/전공 : 경희대학교/언론정보학과
- 팀/업무 : 경제정책팀

새해가 밝았습니다. 차분히 과거를 되돌아보고 앞날에 대한 설레임으로 두근거릴 때이지요. 송구영신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차갑습니다. 엉터리같았던 작년은 떠올리기도 싫어지고, 앞으로는 어떤 거짓말같은 일들이 벌어질까 두려워할 뿐 실낱같은 기대를 품기도 어려운 날들입니다. 그저 조용히 이불 덮고 방안에 웅크린 채 오늘, 오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기 바쁩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촛불은 곧 꺼지리라는 어느 정치가의 말이 진짜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만, 나약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2016년에 이어 올해도 91년생은 삼재래. 그리고 내후년엔 또 아홉수

라네"라는 친구의 말에 한숨 폭, 한번 내쉴 뿐입니다. 파릇파릇한 대학 새내기 시절부터 사귀어 어느덧 30대를 앞둔 동기들도 하나같이 같은 마음이더군요. 서로 아픔에 공감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사회 전체가 병리적 우울을 앓고 있다는 걸 은연중에 알 수 있어 무섭다고 해야 할지.

설날에는 운동주 시인의 시집을 읽었습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나아가야겠다."는 구절이 유명하지요. 어찌면 하고 있던 공부를 제쳐두고 돌연 경실련에 들어가야겠다 결심한 것도 '부끄러움'때문은 아니었을까 합니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꽤나 긴 단어들의 조합입니다. 하지만 그 중 '실천'이라는 단어가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가장 원론적인 정의마저도 실천하기 어려운 시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비근한 호소가 현장에서는 물정 모르는 소리로 들리는 시대. 무릇 정의에 대한 열렬한 투신은 그것이 실제로 이뤄지리라는 확신에서 온다고 믿었던 저였습니다.

그런 저는 지금의 시대적 분위기- 일시적 분위기에 그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폐단, 경향 등을 대신해서 사용합니다 -를 맞아 체념하며 더욱 몸을 웅크려왔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아무것도 창조할 수 없다는 죄책감과 한 줌의 부끄러움만은 간직했고 다시 한번 '실천'해보고자 경실련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더 큰 부끄러움. 저와는 달리, 이 엉터리같은 시

대적 상황에서도 정의에 대한 확신을 확고히 한 이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전경련 해체를 위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GMO 식품 안전 확립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 부분적이거나 그 일들에 받을 담가볼 수 있었던 것은 더없이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기의 향방이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담담히 시합에 임하는 운동선수, 목숨을 담보로 불길을 헤쳐나가는 소방관 등등. 자신의 의지로 정해지지 않은 운명을 정해진 것으로 바뀌어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경실련의 목표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돌연 공직자의 자녀가 '낙하산'으로 찾아오는 불예측성의 시대를 그만 끝내고자 하는 것이 경실련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새해가 밝았습니다. 경실련의 행보를 바라보며 저는 조금씩, 정의가 확립되는 미래를 꿈꿔보기 시작했습니다. 앞날에 대한 설레임을 되살려준 경실련에게 일말의 감사함을 품습니다.

- 성명 : 류승현
- 학교/전공 : 서울대학교/경제학부
- 팀/업무 : 소비자·시민권익센터

- 성명 : 김동규
- 학교/전공 : 연세대학교 UIC/경제-정치외교
- 팀/업무 : 경제정책팀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국제대학 언더우드학부에서 경제학과 정치외교학을 전공중인 김동규라고 합니다. 제가 경실련 통일협회의 인턴으로 지원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통일과 북한문제에 대한 제 개인적인 관심사입니다. 저희 세대는 청소년 시절부터 현재까지 극단적으로 변화하는 대북정책을 경험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엔 김대중 정부 시절 금강산 관광과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장면을 보았고 이어지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개성공단의 활성화를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의 대북강경노선 정책 및 천안함, 연평도, 지뢰도발에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과 냉랭해진 남북관계는 저에게 여러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러한 학문적, 그리고 개인적 호기심으로 인해 저는 더욱 더 통일정책 및 북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 경실련에서 주최하는 남북화해 아카데미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통일아카데미를 수료하면서 제가 몰랐던 북한과 통일정책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고 통일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과 견해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심은 현재 제가 경실련 통일협회에서 인턴을 지원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재 제가 맡은 업무는 통일협회 백서바간에서 외교분야의 주요이슈 분석 및 자료수집입니다. 경실련 통일협회는 조기 대선이 예측되는 가운데 지금까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주요 이슈별 그리고 국가별

## 2016년 겨울 인턴활동 후기

이서연  
사회정책팀 인턴

경실련에서 인턴생활이 1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겨울방학 단기로 진행 중인 인턴 프로그램의 절반이 지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경실련 방문할 때의 두근거리던 심정이 선명히 기억납니다. 벌써 한 달이나 지났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경실련 인턴생활 첫날은 2시간가량 OT를 하면서 경실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었고, 그때 처음으로 인턴들을 만났습니다. 각각 다른 부서로 배정이 되어 국장님과 간사님을 만나 뵙고 앞으로 어떠한 부분을 다룰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인턴생활 일주일에 가장 '황금'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목요일마다 있는 인턴들 간의 점심식사! 일명 [식사를 합시다.] 프로그램입니다. 누가 이렇게 작명을 했는지는 아직도 미스터리이지만, 저희에게는 '꿀'같은 시간입니다. 인턴끼리 편안하게 대화할 주제나 시간도 마땅히 없고, 각각 다른 부서에서 각자의 업무를 하느라 이야기 할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밖에 나와서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이 일종의 낙이기도 합니다. 틈틈이 나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디저트나 커피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처음 OT때 이루어 말할 수 없었던 어색함은 이런 식사를 통해서 점점 사라지고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인턴의 또 다른 즐거움은 [점심시간]에 나타납니다. 인턴들끼리 챙겨온 각자의 도시락을 구경하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소화 기능이 뛰어나지 못해서 샐러드를 먹는 저와 달리, 매일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오거나 햄버거 등을 사오는 것을 보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편의점마다 다른 도시락과 색다른 메뉴를 구경하면서 인턴끼리 점심식사를 보냈습니다. 하루를 점심시간, 그리고 퇴근시간을 기다리며 버티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로 분석하여 백서를 발간하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중에서 외교분야를 맡아서 자료조사를 하고 있고 학교과목으로 배울 수 없었던 여러 현장에서 많은 학자 및 시민운동가들의 연구들에 대해 접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인턴들과 같이 기본소득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국에서의 실현가능한 기본소득 모델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경실련 인턴인만큼 첫 번째보다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고 나가고 싶은 것이 제 바람입니다.

기자회견문에 제가 조사한 내용이 쓰여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뿌듯하고 보람찼는지! 인턴이 끝나고 뒤돌아봤을 때도 이 기자회견이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하고 다른 인턴들과 팀을 이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턴 기간도 열심히 근무하면서 많이 생각하고 많이 배워서 마지막에 웃는 얼굴로 동승동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

- 성명 : 정다혜
- 학교/전공 : 중앙대학교/정치국제, 경제
- 팀/업무 : 경제정책/경제정의연구소, 자료 조사 및 정리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에 재학 중인 정다혜라고 합니다.

시티-경희 NGO 프로그램으로 인턴에 지원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느 NGO단체에 배정받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경실련에 배정받은 사실을 알고 뉴스에서 이따금씩 들어본 경실련에 대해 알고 싶어 인터넷 검색을 하던 때가 기억나네요. 들어는 봤지만 정확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몰랐던 경실련에 들어와서 어떤 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직접 보고 업무에도 참여하면서 경실련에 대해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경제정책팀에서는 최근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해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저는 기자회견을 위한 자료조사와 자료정리로 일정부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쓰고 보니 먹으러 다닌 것 같습니다.(하하)



▲ 인턴스케치\_이서연

인턴 생활 중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은 [인턴 프로젝트]입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오후 2:00- 5:00 까지 특정 주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준비합니다. 처음 주제를 정할 때 국장님이 들어오셔서 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정리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좋을지 방향을 정해주셨습니다. 그 외의 부분은 저희 인턴 반장님이 멋있게 이끌어 주십니다. 저희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노트북으로 여러 정보를 찾아보며 야심차게 준비를 하며 꿈꾸지만, 중간 점검에서 잘못된 방향을 체크해주신 국장님 덕분에 단체로 혼이 나가버린 적도 있지만요.(하하) 매주 회의 날마다 노트북을 챙겨와 각자 주어진 정보와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정하고 발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경실련에서 생활하면서 인턴들끼리 가장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경실련의 건물은 너무 깔끔하고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각자 부서에서 자신의 자리에 앉아 좋은 컴퓨터를 통해 뉴스와 정보를 확인하고 국장님과 간사님 밑에서 많은 정보를 깨닫고 일을 배워갑니다. 사무실도 크고 화장실도 깨끗한 경실련에서 가장 매력적은 것은 CAFE JUSTICE입니다. 1층에 위치한 CAFE를 보고 정말 운영하는 카페인줄 알았습니다. 넓은 사무실 못지않게 좋은 탕비실이 위치해있어서 점심시간마다 편안하고 기분 좋게 식사도 가능했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기계도 있어서 아침에 종종 아메리카노를 내려먹어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경실련 인턴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PD수첩, 기자분과의 미팅 등 뉴스, 신문, 미디어 등을 통해서 보기만 했던 것을 직접 경험하는 기회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각각 다른 환경, 장소 속에서 자라온 대학생들이 모여 인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 의견을 종합하며 토론하기도 하고, 국장님과 간사님 밑에서 각자 배치된 부서의 업무를 이해하고 배워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모두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기 보다는 부족한 것을 채워가고 깨달아가는 시간이 굉장히 뿌듯하고 즐겁습니다. ☺☺

카드  
보  
는  
이슈1

# 개성공단 폐쇄 1년, 지금의 상황은

조성훈 통일협회 간사  
reunification@ccej.or.kr

**개성공단 폐쇄 1년,  
지금의 상황은?**

**“개성공단 가동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이용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개성공단 폐쇄 발표**  
2016년 2월 10일

**감작스러운 폐쇄 결정에 입주기업들은 물품 반출이나 폐쇄에 대비한 준비 없이 부랴부랴 개성공단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및 지원액**

실질피해액	1조5천억원
지원금액	4838억원

**피해는 1조 5천억원 + α**  
**보상은 32.3%에 머물러**  
개성공단기업협회 2017.01.13 추산 자료

**입주기업들은 경영위기에 몰리거나 울며 겨자먹기로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여 경영을 이어나가고 있다.**

**개성공단에서 일했던 많은 주재원들이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게 되었다.**

카드로 보는 이슈 1

개성공단 폐쇄 1년, 지금의 상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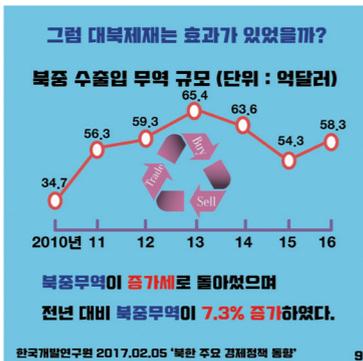
**개성공단 입주기업 현황**

현황	기업 수
사업 유지	76
하청업체 전락	36
사업포기	11
총 기업수	123

개성공단비상대책위원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대한 우려로 일어난 개성공단 폐쇄는**

남북경협 + 시장경제 경험 기회 상실 경제 침체 극복 동력 상실	남북화해 + 협력의 기회 상실 통일 늦어짐
한반도 불안 간장 고조 동북아 군비경쟁 코리아디스카운트 확대	남한 기업들의 막대한 피해만을 초래 기업들의 경영 악화/파산



역대 가장 강력하다는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는 '안정적' 성장 기초  
**결국!!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카드로 보는 이슈 2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꼭 도입되어야 합니다

조성훈 통일협회 간사  
reunification@coej.or.kr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번에는 꼭 ~~ 도입합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너는 누구냐?**

고위 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왜 필요할까?**

검찰은 행정부 소속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의 직·간접  
통제를 받고 있어

대통령, 측근비리,  
권력형 비리 수사가  
구조적으로 어려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정치 검찰의 현주소**

정치검찰 권력의 시녀  
견(犬)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래서 필요해!!**

2014년  
정운희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정운희 '국정 개입'은 사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래서 필요해!!**

최근  
우병우 민정수석의 각종 의혹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2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까?**

2016년 7월 야 3당은 공수처 도입 합의  
그러나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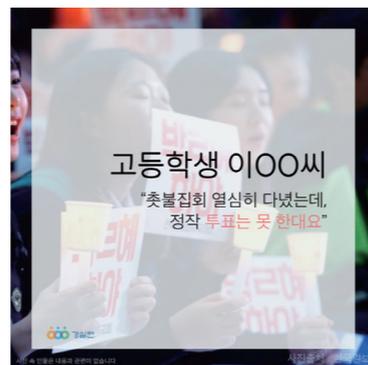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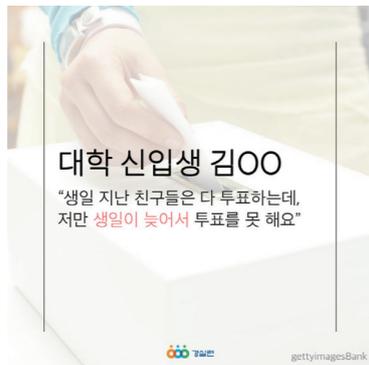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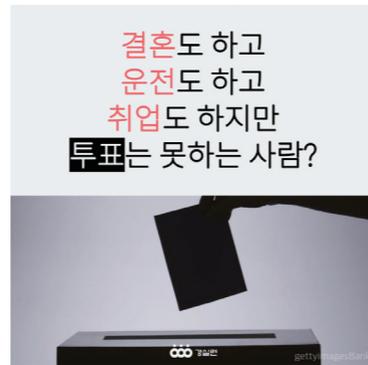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제는 도입 되어야 합니다**

촛불 민심 받아 안아  
검찰 개혁 첫걸음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법안  
꼭 통과 시켜야 합니다!!

# 선거 연령 18세 하향

유애지 정치사법팀 간사  
aejiyu@ccej.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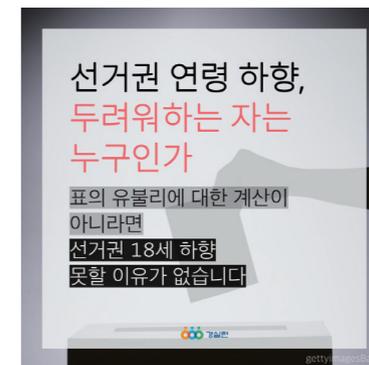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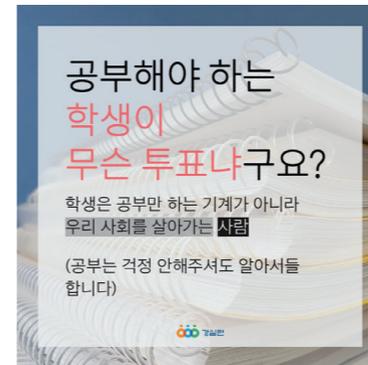


구분	선거 방법	연령 기준
결혼	인법	18세 이상
8급 이하 공무원시험 응시	공무원임용시험법	18세 이상
지원 입대	병역법	18세 이상
운전면허 취득	도로교통법	18세 이상
취업	근로기준법	15세 이상
선거권	공직선거법	19세 이상

**투표만 특별히 19세?**  
우리나라 현행법상 18세가 되면 결혼과 운전면허 취득, 취업, 입대, 공무원시험 응시도 가능하지만 투표는 할 수 없습니다



# 선거 연령 18세 하향



## SNS에서 많이 본 이슈

### ■ 인명진 전 공동대표의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직 수락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지난 12월 23일에 인명진 전 공동대표가 회원들과 어떠한 상의도 없이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의 책임을 지고 해체되어야 할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수락한 정치적 행위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어요. 많은 회원들이 침몰할 새누리당을 구원하겠다는 것이냐며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여주셨고, 실망과 분노의 심정을 전해주셨어요.

### ■ 조기출근한 헌법재판관들...이정미 머리 '시선강탈'

지난 3월 10일 박근혜 탄핵심판 선고날 이정미 재판관이 머리에 헤어롤을 하고 출근하는 사진을 경실련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탄핵 인용 결과와 더불어 많은 회원들이 폭발적인 좋아요와 공감을 해주셨어요. ["머리하다 늦으신 오늘의 그분보다 멋집니다. 얼마나 경황이 없으셨으면 고생 많으셨습니다."] #탄핵\_인용 #헌재\_이정미\_멋집니다 경실련 SNS 활동이 앞으로 회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가볍고 유쾌한 분위기로 전환하려고 해요. 많이 응원해주세요.

### ■ 박근혜 정부 4년, 국내총생산(GDP)보다 집값이 3.5배 많이 증가

지난 2월 8일 박근혜정부 4년간 집값 상승액이 국내총생산(GDP) 증가액보다 3.5배나 높다는 자료를 발표했어요. 집값 총액이 781조원 증가한데 반해 GDP증가액은 223조원에 불과해 경제의 부동산 의존도가 심각한 현실을 드러낸 거지요. 회원들은 '이래서 헬조선이다, 불로소득 공화국이다' 라고 비판하며 경실련 조사결과를 많이 공유하셨어요. 경실련이 올해 땅과 집의 불평등 청산운동을 시작했어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해주세요.

## 신입회원 한마디 "반갑습니다! 회원님"

- 양세영 | 경제정의를 실현하여 지속가능한 경제를 이룹시다. 왕경희 |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 오창훈 | 경제 민주화를 위해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식 | 사회정의는 경제정의로부터 출발합니다.
- 오경준 | 이제 곧 서른, 좀 더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 변수원 | 정유년을 맞이하여 새벽을 알리는 닭울음처럼 경제정의를 시작되는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박현명 | 취지에 꾸준히 충실하십시오. 유연희 | 응원하고 싶다.
- 김태형 | 늘 용기있고 전문적인 활동 감사드립니다.
- 김시원 | 약 2년 전에 인턴 활동하였던 김시원입니다. 진작에 가입했어야 했는데 취직한 지 6개월이 지나 가입하게 되었네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경실련 파이팅!
- 안연근 | 경제정의를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류은영 |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기고를 받습니다. 사는 얘기, 궁금했던 사항에 대한 질문, 경실련 운동에 대한 의견, 「월간 경실련」을 읽고 느끼신 점 등을 자유롭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이메일 [news@ccej.or.kr](mailto:news@ccej.or.kr)  
 페이스북 [facebook.com/ccejjustice](https://facebook.com/ccejjustice)  
 전화번호 02-766-5627~5628

Homepage



Twitter



Facebook



## 경실련은 하루하루 시민과 함께 걷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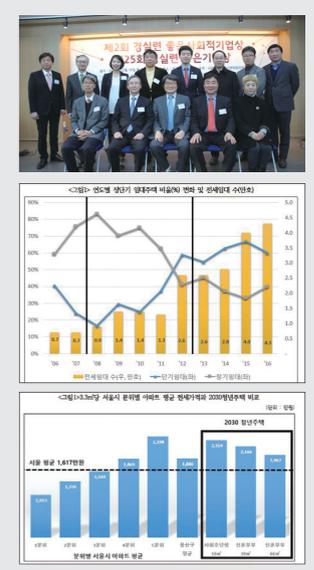
### 2016. 12

- 12.01 박근혜 의료계이트 관련자 검찰 고발
- 12.07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 및 면세점 특혜 수사촉구 전문가 147인 공동성명 재벌들의 뇌물죄 의혹은 특검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히는 길 밖에 없다
- 12.08 탄핵하라
- 12.13 최저임금법 개정안 입법청원서 제출  
2030 소득과 하위 20% 전세가격 변화 비교
- 12.15 방통위는 수상한 신분증스캐너 도입 즉각 조사하라
- 12.19 제2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 및 제25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시상식
- 12.21 '위증교사' 의혹 이완영, 이만희 의원은 즉각 국정조사 특위 사임하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건강보험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제기 촉구 의견서 제출
- 12.23 인명진 전 공동대표의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직 수락에 대한 경실련 입장
- 12.26 인명진 전 공동대표 <경실련 규약 및 윤리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영구제명' 조치 기자회견



### 2017. 01

- 01.10 월 300만원 연금소득에 보험료 '0'원  
정치권은 김영란법 기준 완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 01.11 저소득 장기체납 180만 명, 의료사각지대 노출  
전경련 30대 재벌 회원사 회원탈퇴 공개질의
- 01.12 권력형 부패의 산물, 미르K스포츠재단 해산 촉구 기자회견  
직장가입자는 연 7000만원 '금융·임대'소득에 보험료 '0'원  
식약처의 GMO표시 고시 개악 반대
- 01.13 "국무조정실, 식약처 GMO표시 일방통행 막아야" 기자회견
- 01.18 서민 경제와 무관한 김영란법 상한액 상향 시도 즉각 중단하라
- 01.19 박근혜 정부 공공임대주택 공급현황 분석  
제약사 부당이득 환수소송 조속히 추진하라!  
박근혜 정권의 공작정치 철저히 진상규명하라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청구 기각에 대한 경실련 입장인상을 즉각 결단하라





- 01.20 삼각지역 2030청년주택 임대료 분석
- 01.23 정부의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입장  
황교안 권한대행은 안정적 국정관리에 매진하라
- 01.24 행자부의 개인영상정보보법(안)에 반대한다
- 01.25 삼각지 청년주택 살기위해 소득 1/3이상 지출해야
- 01.28 미래부, 개인정보 위탁사업자 KAIT 관리감독 직무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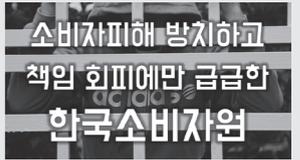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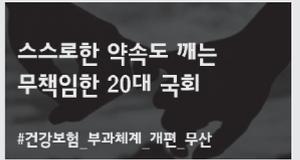


2017. 02

- 02.01 2월 임시국회 '18개 개혁입법과제' 발표
- 02.02 국회의 전경련해산촉구결의안 처리를 촉구하는 경실련 의견서
- 02.06 정부는 범죄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전경련에 대해 즉각 설립허가취소 절차에 나서라!
- 02.07 황교안 권한대행 압수수색 거부는 국정농단의 공범임을 자인한 것!  
산자부의 전경련 설립허가 취소 촉구 기자회견 개최
- 02.08 박근혜정부 4년, 국내총생산(GDP)보다 집값이 3.5배 많이 증가  
원내 5개 정당에 전경련 해체 정견 공개질의  
7개 시민사회단체, 공수처 설치 법안 2월 국회 처리 촉구 기자회견
- 02.09 미르·K스포츠재단 청산계획 및 현황에 대한 공개질의  
규제프리존법 중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항 반대 의견서 제출  
일반적인 GMO활성화정책, 과학의 축복이 아닌 재앙 불러  
국민의당 재벌특혜 면세점 사업제도 개선을 위한 '관세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남북관계 회복의 단초이자 남북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정상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
- 02.10 박근혜 정부 지역별 아파트 값 상승 최대 496배 격차, 강남3구 상승액만으로  
전북 아파트 2채 살 수 있어
- 02.13 국회는 2월 임시회 내에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의견서 국회 제출
- 02.14 원내 5개 정당에 '전경련 해체'에 대한 공개질의 결과 발표  
정부는 꿈수 피우지 말고 후분양제 즉시 시행하라
- 02.15 현대차와 SK는 전경련 탈퇴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 02.16 경실련, 제19대 대선 주자 8인에 <전경련 해체>에 대한 공식 입장' 요구  
자유한국당은 의사일정에 즉각 복귀하라  
승파3모녀 울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자격 구분 없애고 소득 중심으로 공평하게  
개편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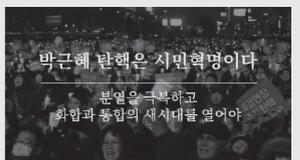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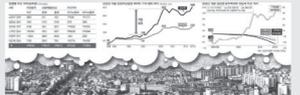


- 02.17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대한 경실련 입장  
아파트 후분양제, 진실은 이렇습니다!
- 02.20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즉각 결정하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전경련 해체 촉구 결의안」 처리에 즉각 나서라!
- 02.21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관련 국회의원 공개질의 결과
- 02.22 특검은 우병우 보완수사 통해 영장 재청구해야  
전경련 해체에 대한 대선주자 공개질의결과 기자회견  
소비자 피해를 장기간 방치하고 외면한 한국소비자원
- 02.23 미래부의 민간위탁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전경련 해체에 찬성했던 자유한국당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국회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즉시 입법화하라  
서민의 실질소득을 늘리는 것이 내수활성화의 근본 대책이다
- 02.24 전경련은 설립목적 위반과 공익성 훼손에 대한 책임으로 자발적 해체를 선언하라  
국회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멈춰선 안 된다  
국민의 당의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의무화 약속을 환영한다.  
부끄러운 줄 모르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피해 2년7개월 방치하고도 책임회피 급급해
- 02.27 황교안 권한대행은 독단적인 특검 연장 거부 즉각 철회하라!  
성희롱 사실로 확인된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을 즉각 해임하라



2017. 03

- 03.02 상품권의 음성적 거래 방지 위해「상품권법」제정해야  
공수처 3월 국회 내 도입 촉구 공동논평
- 03.03 3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 반드시 처리하라!
- 03.06 경실련, 경향신문 공동기획 - 지주의 나라 ①서울 아파트값 30년간 변화실태 분석  
국정원 현재 불법사찰 의혹 국정조사·특검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라
- 03.07 양극화 해소를 위한 2017년 세법개정 건의안 제출  
박근혜-최순실의 '미르·K스포츠 재단' 청산절차 시작에 관한 입장
- 03.08 정부는 한반도 사드배치를 즉각 중단하고 차기 정부로 넘겨라.  
주거관련 시민단체,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 발표
- 03.09 공공과 재벌건설사 후분양제 의무화 입법청원  
문체부가 미르재단의 출연금이 뇌물임을 밝힌 만큼, 반드시 청산하고 국고로  
환수하라
- 03.10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시민혁명이다  
임금체불 미봉책 아닌 근본대책으로 해결해야



\* 경실련의 모든 성명 및 발표자료는 경실련 홈페이지 (www.ccej.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입 회원님을 소개합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전국신입회원 179명, 가입일: 2016년 12월 1일~2017년 2월 28일)

유관익(중앙인사팀)	김기영	김순옥	김지환	노만균	박홍철	신기람	오병건	이길영	이재일	정영창	최원영
(주)허리건설	김니영	김승길	김전득	노진호	반영덕	신동윤	오세현	이대형	이재호	정중훈	최인찬
강영희	김대봉	김시원	김찬중	류은영	백평효	신민희	오지영	이문영	이창건	정진길	티제이(주)
김재규	김동철	김연우	김창석	류호웅	변수원	신부연	오창훈	이미순	이태열	정태호	표명순
고나현	김명옥	김연호	김창현	문상돈	봉요근	신인철	왕경희	이상형	이현숙	조경송	하성용
고동우	김명주	김영란	김태연	민선희	서동국	신찬숙	유연희	이양주	이현우	조소연	한범덕
고희경	김명희	김영식	김태학	박경자	서복원	신한건설(주)	유재기	이열호	이희전	조재기	함라연
곽도훈	김민정	김영준	김태형	박민용	서영대	심상록	유청	이영수	이희중	주경님	허민도
곽도훈	김병규	김영호	김학구	박병규	서정원	안연균	유희동	이외자	임현규	주식회사	허인설
구지범	김성민	김은경	김현수	박영훈	성기원	안재범	윤수금	이옥재	장미진	삼성특판	홍남기
권순식	김성울	김은주	김현진	박정희	손성민	안종태	윤순모	이원경	장우석	진연수	황경희
권 종	김성주	김재성	김형기	박종만	손수익	양세영	윤영태	이유열	장재수	진장수	황병일
권택중	김세린	김정효	김희연	박주원	손창우	양은진	이광자	이윤행	전재은	차태영	황영미
김광성	김세원	김주현	니영구	박태원	송 샘	오경준	이규혜	이은경	정상훈	채주석	황영철
김기석	김성민	김지혜	남승용	박헌명	송인철	오미정	이그루	이재석	정선우	최범빛	황혜정

중앙경실련	송기성	진유식	장석림	김귀해	권찬	전성철	이의영	김현정	김승보	유덕열	김진현
	김정훈	정병오	채민성	민선옥	김우비	김규훈	임현빈	박지우	안효정	박재완	윤상균
고정희	장해령	송용석	정준수	김중민	박순기	김용호	임효정	서은경	이재림	김진수	최인호
김원재	김홍관	김영준	성신	김용숙	이병관	오승훈	조희근	이상현	이경수	공병욱	김완욱
윤종호	박미나	손재운	손승태	윤효상	최범식	이기종	홍대식	최성주	홍순영	성금성	김성수
박우석	김대현	김성중	김혜순	김인곤	정희창	김영실	정연섭	안희숙	이승우	황이남	김근수
김상중	권오진	박태선	김효선	이석규	한형욱	조광희	고영희	김석환	홍종학	송병록	정중식
유기석	이현석	박세원	김중우	이소영	조규홍	김태수	진영수	김재구	이상철	장석춘	김호연
박완기	박의용	김문환	이운향	이종길	배인명	김현석	이대영	나권일	김세진	이광택	김찬석
조광현	김용	이갑수	이보실	박진홍	강문희	이현재	김대훈	김일수	김호식	정태완	이영호
채홍석	최민	이경도	천대웅	안용식	황선원	이석재	문태현	김진구	이석진	김양진	유기청
이창섭	김민수	유항임	조정근	양창우	문미란	김태훈	서윤석	서완석	김순임	박인선	임성희
황민호	박용순	한동운	박남규	이강은	정창수	이석기	김기숙	곽기훈	신철영	서영덕	허남중
김영희	류동훈	김애자	정혁제	이경우	이영현	김영은	이규용	김철홍	김병각	정재진	라운흠
박희진	노정호	김형균	정영만	김무준	한상훈	박정식	정창운	이운상	김주영	임정규	양연식
차진구	류화근	안지현	전기호	곽희남	강일환	곽의영	임건목	문석진	이다혜	최창배	백정숙
김병철	한용환	한석웅	장희곤	김철주	이삼열	이은기	최정표	박성혁	김남덕	김성수	백진현
백명희	정경옥	김중덕	최희수	김연주	류지성	김병수	전대홍	최영희	유재혁	권상주	송태교
이종은	박호영	안완용	박후근	최지현	김지영	박종규	김상균	이금희	방중수	박두영	권득용
백복수	신동조	김정호	김만수	민남미	이경태	박해란	장영환	이영욱	양광희	안종범	원영진
안규창	장심영	강재혁	김경배	차은상	조소열	정명채	유인환	조진수	김규범	김관영	조형준
조일흠	전병식	이지훈	권준기	구성찬	강철규	고지석	김철환	문소상	김경모	박성정	이윤규
임태영	박희선	안정혜	박희령	강경수	이용승	안철원	변상해	서직원	김왕식	문장협	박행우
전상옥	김명기	권율학	이광섭	채원호	고형석	김성훈	김태현	이형희	김병학	박호걸	김찬호
김형조	정승화	정재은	최준용	박경준	김현동	김철	류명현	김경환	유남식	이준영	김미진
김효원	한승구	조성희	김지수	이종윤	김삼	이기우	김해성	황인규	김준식	황신준	강혜정

김은영	이영란	박재익	장용근	천승걸	김태호	김유찬	주찬식	이경숙	장철기	이영재	최윤진
석철수	노재훈	조성희	김재환	안영훈	최광현	최종석(최성지)	김호	김복환	문인섭	박준영	박영민
조준범	김대선	김천	유동진	소순창	최홍엽	이익모	권철민	이수연	김희영	권순범	김생수
김준한	장유환	홍성환	문금희	임용기	양혁승	김태균	전우영	윤한필	윤인오	최지성	조은호
최원영	박영남	조강희	이상구	김혜숙	이기승	장은미	신봉기	김명임	이재완	박한호	김경철
박은아	손건일	김보경	김기열	김병수	이모세	정일용	김종록	박기훈	이원식	고경일	김국주
김현수	김완래	권영진	김용직	이은재	남원호	최석준	김준영	장문호	권준우	설원식	공진하
최덕천	최영식	김중배	정연태	김찬동	심종진	서종철	이재욱	여해경	서정일	조재연	권혁민
이화영	이종규	김영철	홍광선	소진성	이상엽	문세영	윤대현	이상룡	이동호	설창인	이동석
이경희	박영기	김진만	강영구	이상엽	원혜영	박철수	송인섭	최수진	이기용	박병일	김중찬
강선미	백오한	서중대	손성일	박준수	황도수	이형세	황영미	권순용	박진순	권준석	손희준
이상윤	경민수	이진경	이순배	김재구	김영재	전봉진	이경준	구경이	최지훈	홍준표	박한용
홍준현	김수영	조상호	김태완	성광식	이용한	정왕규	김주영	최유영	이현숙	김윤두	김선필
유평준	주용학	이원재	박승욱	주관수	박상렬	김호균	구수정	한용석	이상훈	김지혜	송수영
유희숙	이용선	강철승	박승진	안상용	박성배	임서구	이봉훈	윤숙자	한국신협(재원공제조합)	황기명	신은정
이정희	김학수	박종소	김동영	이범재	성윤숙	최호영	이호경	정선화	이석범	김원태	현승근
김호성	배장수	황철진	정성봉	이상욱	신정무	송기민	황신영	안병준	이신호	장민수	선동수
정진민	김형원	송인윤	공정표	김태진	이광현	신상진	전상룡	박영철	장영오	이규철	김형규
김상겸	윤종빈	배영환	신동진	최경순	김근철	고진강	지동익	김태현	이명천	이수영	김성필
손준보	이정희	최태영	서순탁	윤건수	이영음	윤기복	홍성규	원재환	이재운	정선혜	정병순
크레딧책임(주)	김창범	박영웅	정세훈	김남훈	마미영	남호현	구길두	임명호	김상영	이동석	이명훈
이춘수	김호경	김창식	정미화	박선희	계충미	남호원	김정호	이재걸	이영범	안인화	박수형
한승호	박종철	김용하	최홍식	이근식	이봉숙	이상희	김영주	문상준	정주연	박창임	보선
윤영천	하용호	신영철	이군성	정세진	강원호	김대호	정덕임	배우아	정한균	김용남	남기원
권규향	김용찬	오세호	김태형	이민아	이동준	홍미미	조준형	장중철	형성훈	이화주	김윤기
이용배	정석희	박용석	김용철	김주종	장영식	이정남	박상대	조진오	조경민	김유룡	박경애
김상우	최희준	김대성	김종묵	허원철	곽남준	이근환	민병욱	전병순	안세영	유일용	최희수
권경우	정삼룡	박양제	임장원	천민승	고강석	김종섭	이호섭	황경복	김형진	김용섭	최원천
김홍규	홍도천	서승완	이원희	조병익	장형환	한홍열	김영균	류시문	박기철	김재하	박서희
김희철	주상희	박영규	홍창기	이창엽	박제화	이원재	허수범	김한나	김준배	황호열	김양수
이진영	나병현	천병우	신현호	정제용	성병화	이호욱	신영철	임청빈	박지호	김병구	황이숙
김준	김혜경	윤영근	유재욱	김종환	신용규	이승수	이창희	박영규	이창효	유기천	지정희
윤종식	최윤재	김은현	박훈	권영준	박현진	손호중	박민준	변준섭	안희철	이만호	정승상
이성재	김진호	김원배	이종범	김종걸	김현덕	허석	김성태	정미숙	양윤숙	김보라미	윤진철
김원석	이덕희	김형준	정승준	정태명	박재갑	김현성	윤경숙	조연정	황유경	최수진	정인호
곽새별	맹성렬	신두철	이인영	문경식	최은진	전용일	이선신	이지영	박보성	정혜승	김태수
원종호	최덕호	김유환	곽지웅	김재일	김병주	이현미	최장원	나명희	김유진	최승섭	곽복률
강창균	장병호	김철호	김경수	이학수	양대규	최지한	이성근	허익배	송미영	이훈	김경수
박주은	정범석	류도암	권향년	한승호	이광필	최종길	노연경	음유정	권태환	신지영	김광현
강덕순	김대중	김익수	남현주	김지연	이광월	송강욱	전봉양	석기영	정동민	원동환	이근태
권삼용	신원기	곽효석	변동철	김영미	안기정	김영순	강민구	김평진	권일민	박건영	유해신
이태진	함동균	추동균	박은현	박상성	이진원	손봉호	강지영	박병오	이낙원	이상우	김민선
박기영	김인영	오세정	정원철	심순혁	정태근	유종성	김숙희	김양규	정희성	이재환	정중원



이성복	공태영	이철우	강주현	박태영	이재중	손우영	허정준	양성범	송운학	김형욱	장명진
박승상	강창걸	임희청	박화자	이종수	이정성	박지원	이동규	이춘수	여은미	김호현	전은호
허지영	최성실	박노현	남상권	김철호	윤정섭	박술아	박상인	김은경	윤언철	나인수	정성훈
손무길	김관용	유성하	전명석	오상엽	김주목	박경서	신우현	이경중	이덕호	노두승	정애리
정해석	문광기	이희중	황인선	김재윤	김보람	김경아	김호	송경성	이승훈	노동래	정인환
채예정	김정수	박종석	이순기	선종국	장원규	마경화	김하양	오용식	이혜란	도선봉	조돈철
이용만	최인숙	황선용	손정아	김세중	김근초	김정국	김광훈	심인석	임호창	류성룡	조재형
최봉문	변재근	이영중	송원기	정성심	정택수	김소희	김주현	하은규	정길재	류중석	최강림
이한민	박영수	정운수	양두석	김경민	정학수	김삼용	최창호	최근현	정홍준	민범기	최두호
염규석	양인준	최성현	정태성	윤득구	오제명	김윤석	오종현	정광화	천미림	박경남	최명철
김동윤	김영철	이일권	엄원중	문차호	최준혁	이주형	이갑수	권순남	최재윤	박상위	최윤정
유관영	방정혜	배종석	정선철	이근섭	심해정	임영환	구영애	전병화	하능식	박성우	최정우
정정래	전용배	조종철	최성훈	이태영	권상헌	최현준	황인찬	이재길	홍창식	박영웅	하동익
한문희	유재중	이윤호	조진만	김인환	나상민	최재용	신동민	최은경	황은경	박인순	하상우
김종근	박형근	이승섭	노진주	최성수	황진영	박진아	김태균	구자범	황정호	박재호	함승희
김윤식	강창구	장유리	최병오	유병상	정상미	김용태	박희연	송인철		박정윤	
강내원	김인숙	김병호	오순택	조건영	안희정	서한이랑	김은경	양세영	도시개혁센터	박찬우	시민권익센터
김영섭	조용기	박노건	정호진	유송	정윤영	서한송이	김영은	왕경희		박희정	
김정호	최광규	이성계	김상현	황호식	강성일	김재화	이태용	오창훈	강순주	배웅규	김강준
김대균	류형욱	유인상	권동현	함두호	김태호	고윤	한소람	오경준	강준모	서민호	김상헌
박정민	민희숙	박정교	김세중	권윤정	한연하	최은아	차삼준	김원준	고일두	서순탁	김태룡
김창균	허병권	김만호	이주하	김중혁	김세정	이건호	김진섭	이정임	곽도	신행숙	나태균
이상진	김예승	박종선	송하동	김시연	이기호	이정자	윤상욱	천정배	곽충삼	심재민	대호관세사법인
이광용	박지환	이종훈	고행산	조민상	김유신	박세현	권기범	유연희	구자훈	양우현	박병식
안진걸	정원희	이한길	주정윤	문현정	김래관	신동민	양석영	김태형	권영진	오세형	박승민
이동주	한영관	소경섭	박영환	정해승	송은우	김선화	안경숙	김시원	권일	윤재용	박인동
장경안	박종원	김성희	아름다운	이애화	박광현	김동욱	신동엽	김경희	이동근	서경수	김정수
박지호	김진아	소세영	한의원	이재은	임세은	황주란	김성래	경제정의연구소	김광만	이만희	신은숙
하상준	유기현	한선아	김찬형	김지현	안예인	방승범	이영준		김금옥	이명수	신재택
엄인수	김영철	김영복	이정현	박승배	신동애	프라이머디스트리(주)	신재우	강명철	김기성	이병준	신희권
김용석	김정돈	오창환	윤일성	송민정	박윤수	유록수	오영호	곽수근	김덕기	이순배	심재원
최종일	김용식	고은진	장보름	최일	강현신	정정호	조순홍	김동우	김도영	이양재	유주상
박종근	김재길	정용화	김경준	유명진	박기창	김광수	사랑의 채널	김소연	김동식	이유미	이대순
정주연	김명환	김진명	노희철	김태균	이성원	김홍업	이정임	김지환	김미경	이은재	이덕우
김소라	김영준	김민주	이동석	김준호	김광배	김희연	윤상화	김혁	김석기	이재문	이명근
박지은	최은철	박성훈	서경호	안병역	박세권	송다겸	나준희	김홍권	김성수	이정식	이순기
김태훈	장경태	박미선	이승대	이명진	유재민	남재걸	유혜영	노영록	김세웅	이주희	이영길
전장호	김정원	정창률	홍진구	박익중	최은식	박상기	임웅찬	문인철	김영	이창수	이지연
박정석	이윤배	김인태	윤은선	김정현	장미은	최다니엘	이상진	박상안	김재령	이현주	이진
이동한	임종필	박성용	김지호	이상범	김서현	최철화	허종호	백승호	김재익	이희승	이창수
김정신	하현아	안현구	박지혜	윤지원	주익철	김봉진	박영민	백종효	김정철	임경수	이태호
김병수	조성태	이한섭	이남경	윤은주	전영진	박기환	지영석	성호준	김종길	임창규	장영
장옥숙	양원표	장승진	박원규	김정욱	변창우	김유정	강마야	손창민	김철홍	임형백	장진영

전종찬	박경서	전귀정	김형경	전영권	김민수	류금렬	옥방호	제문규	김만규	이상기	고원철
정경수	박근해	전미옥	김형근	정석중	김상기	문상필	옥용석	조병호	김양선	이상수	고재원
조영관	박미라	전영선	김황식	정세환	김상일	문철봉	옥충석	조승재	김연옥	이상락	고형복
조현	박성극	전현준	노영성	정의호	김석준	박광호	옥혁수	조오현	김영식	이상민	곽도훈
추승우	박순장	정동욱	박상덕	정의훈	김선심	박대기	우정숙	조원배	김영화	이성조	곽은
	박영희	정명자	박운남	정현석	김성진	박명옥	원순실	조하영	김정제	이유형	구교형
통일협회	박용주	정승훈	박인재	조남환	김세린	박성호	원종태	주채민	김철년	이인형	구본순
	박은주	정창현	박중시	조무현	김수현	박수정	유차상	지영배	김철수	이정윤	구차환
강만성	박주승	조광환	박주영	진수환	김숙정	박순옥	유천업	진성우	김태열	이창민(철우스님)	권도형
강은석	박준우	주석부	박지호	최규천	김순옥	박애숙	유태영	진희재	김해숙	전용범	권순남
강희영	박준형	차승주	반태연	최복규	김승권	박용안	윤강원	최삼주	김현근	전진대	권혁
고석주	배인교	최우진	배정순	최승길	김승한	박인근	윤길정	최선중	김형기	정병열	권혁이
고유환	배종근	최평규	서은주	최순희	김양곤	박준기	이경희	최병중	김형환	정병우	김경태
곽일환	백인용	최호창	송문길	최승룡	김영우	박추홍	이광재	최양오	김홍규	정석호	김경표
권수복	백학순	추재훈	송민석	최은송	김용운	박태원	이길중	최운용	김홍기	정영권	김경화
김근식	변상호	한광수	송재석	최종문	김원용	반영진	이민구	최윤숙	도형수	정진철	김기영
김동규	서관승	한정훈	신미영	한동준	김잠이	반창오	이민우	최정환	류창열	제갈음미	김남권
김민식	선월 몽산	한준구	신성진	한영준	김정주	배기수	이산학	최창식	마태근	조덕수	김남현
김병조	송정호	홍영근	신승춘	홍용표	김정택	배동주	이상귀	추현철	문성현	조영화	김남희
김삼수	신경화	황대중	심규만	홍진원	김종태	백세정	이상미	한기수	박귀룡	지병구	김다솜
김성호	신영옥	황지연	심윤보	황은남	김종혁	백순환	이상천	한은진	박용찬	최병철	김동범
김세준	신종성		심재상		김종현	백승일	이성호	한인숙	박성준	최삼호	김미란
김수동	심의섭	강릉경찰서	심한섭	거제경찰서	김진성	서용찬	이숙자	한정용	박익관	최암	김미숙
김용수	안춘훈		양창훈		김철관	서주중	이양식	함미경	박종희	최익석	김민재
김용현	위정희	강남일	원경숙	강경수	김창집	손성미	이외자	허추구	박찬진	최진건	김법운
김은수	윤영전	고석태	윤도현	강성배	김충곤	손은희	이은경	허희경	박태광	최춘자	김봉화
김장철	윤태룡	고재정	윤성원	강윤영	김판열	손정식	이장명	현정임	반중국	최현익	김상미
김재기	이기자	구광범	윤순모	강정숙	김판희	손진일	이장표	홍성태	배의용	최홍배	김선호
김재원	이승규	권상동	이광중	강정효	김필성	송수영	이정택	홍원백	배철용	한동훈	김성자
김정웅	이우영	권오석	이귀녀	강지은	김한기	송오성	이종우	황분희	서송기	한순희	김수연
김정진	이익현	김남두	이규승	강태관	김한주	신미경	이창훈	황정득	손영태	휴먼뱅크(주)	김수진
김정현	이장한	김남영	이숙희	강학도	김한표	신미애	이철용		손용락		김승복
김재천	이점호	김동영	이요한	경명자	김현호	신부연	이형로	경주경찰서	신수철	광명경찰서	김애란
김중구	이정우	김봉래	이윤일	고석진	김호영	신용호	장길호		심정보		김연옥
김주호	이종수	김석래	이정임	고영주	김호일	신진영	장동석	곽정섭	안경복	강남	김영근
김진영	이진만	김선정	이제명	권민호	나기석	신진홍	장석주	권기흠	안재철	강성철	김영미
김창석	이현희	김재부	이주석	권순옥	나양주	신찬숙	전갑생	권오현	양철영	강신재	김용관
김태환	이화용	김재준	이지은	권혁중	남기원	안미나	전기룡	김경대	오영석	강욱영	김용길
김학성	임명선	김정근	이진아	권형준	남덕희	염수훈	정보건	김경호	우호식	강욱희	김원선
김형만	임용출	김종남	이효숙	기산종합건설(주)	남원식	여정애	정석윤	김기석	윤병길	강주례	김윤권
노귀남	임홍승	김진숙	장선애	김경섭	남희정	오성관	정선우	김기중	윤정수	강찬호	김윤옥
당명숙	장인석	김진욱	전규화	김경수	노재남	오성주	정종화	김동명	이관	강희규	김윤재
문행규	장형원	김태희	전방욱	김대봉	노재천	육근호	정지영	김만근	이미경	고영원	김윤호



김은진	박영재	신은숙	이상봉	정지선	황재연	김영규	박성수	송광운	이명구	전재상	하주아	김재훈	이덕수	허진	김영희	김남규	이경희	곽동주	김승환	박동규	신영섭	이병희	전영평
김재성	박영훈	신혜정	이상숙	정지원		김영길	박성준	송승중	이민원	전재석	한국비즈니스센터	김종배	이영숙	홍인수	김종수	김두관	이금순	구영수	김신호	박동균	신홍권	이동우	전재호
김정	박옥남	신혜진	이상진	정하준	광주경실련	김영목	박수인	송원식	이봉주	전창주	한명석	김종율	이영희		김창호	김문경	이기형	권기억	김영권	박동환	심병철	이부용	전형수
김정미	박은경	심혜진	이승재	정학균	(유)웅진에너지	김영환	박양우	송운주	이상길	전홍모	한샘	김준희	이미경	군산경실련	김희모	김미자	이두열	권기혁	김영모	박병희	심준섭	이상록	정경선
김정숙	박재금	안철애	이승규	정해경	(주)영암에너지	김용채	박영길	송태석	이상각	정강택	한신구	김진익	이미숙	력키빌딩	김영로	이부형	권대우	김용두	박병주	안병천	이상천	정문정	
김종임	박재철	안철환	이승봉	정해선	(주)대한가스산업	김용태	박옥란	송학동	이성근	정두숙	한희주	김진희	이상도	(유)장원물류	박영미	김옥순	이선주	권동일	김용찬	박병준	안영석	이상필	정성운
김종진	박재희	양금석	이양희	정희균	(주)영암마트	김은영	박웅	송형일	이상길	정병호	허기석	김철광	이성철	(주)김장독	박정민	김용훈	이임순	권병훈	김용철	박병철	안정향	이상화	정순천
김진경	박정옥	양기대	이연주	조경봉	(주)해양도시가스	김인수	박이화	신은화	이승노	정상문	허문수	김현미	이수영	1001만경관테크수송점	박종수	김종열	이재홍	권오숙	김윤호	박병호	안화석	이석형	정연옥
김진숙	박종기	양승오	이연숙	조범상	강대욱	김일술	박정열	신은희	이연	정선수	허탁	김휘연	이영애	OC(주)군산공장	박희찬	김준현	이정규	권오준	김재범	박성원	양현규	이선혜	정영모
김탄일	박종미	양정현	이영신	조상희	강신주	김일호	박종근	신재안	이영기	정용완	형민우	김휴진	이원재	강왕근	석경수	김진희	이정수	권윤집	김재용	박승철	염봉훈	이성	정영은
김현정	박주한	양철원	이영희	조아라	강오일	김재석	박종렬	신주환	이은방	정원태	홍영신	김희덕	이원희	강윤필	송정복	김창집	이정수	권재국	김정렬	박영식	염인용	이성철	정은숙
김현정	박준서	오영희	이득재	조은하	강은섭	김재중	박준근	심재훈	이인수	정은수	황동현	김희철	이정건	고계근	심재숙	김철경	이종기	권휘동	김종건	박재열	에스제이건설(주)	이수원	정재근
김현희	박진기	오민석	이원영	조태섭	강인식	김재찬	박찬숙	안병주	이재길	정일용	황보관석	나효훈	이재수	고덕영	안중호	김형창	이종준	기일형	김종웅	박종률	여우현	이수호	정제영
김혜정	박진석	오성남	이윤식	조해성	강정미	김정훈	박창기	안샘물	이재석	정중현	황윤용	노상진	이종률	군산도시가스	오은정	남기후	이종재	갈성민	김종태	박종익	여은상	이연재	정창길
김효숙	박춘선	우동훈	이은경	조화영	고근	김종재	박창수	양관운	이재원	정진철	황주안	라병희	이창형	군정에너지(주)	오태화	남익선	임학현	김강식	김종돈	박종철	여택동	이용세	정태완
김희수	박태준	우병설	이은영	조홍식	고려가스(주)	김주현	박창수	양동운	이재윤	정찬용		박경삼	이태동	김동희	유애순	도현순	정일환	김경민	김지현	박준상	오경학	이장수	정한영
남기표	박형근	우혜정	이재춘	주태진	고려가스(주)광주	김지인	박창현	양명희	이정근	정해경	구미경실련	박성도	임은기	김영혜	이경은	류문식	정해원	김국태	김진호	박진수	오미영	이재민	정희교
남윤화	배권식	원범재	이정희	지미선	고영삼	김철현	박철웅	양진환	이정량	정해련		박성표	임재권	문영수	이광석	문태식	정희상	김대식	김창규	박치상	오병찬	이재일	조광현
노경임	배준	유수연	이종덕	진장호	고은옥	김해룡	박태규	양해령	이정주	정환송	강명천	박순이	임주석	박은아	이상운	문현미	제일환경(주)	김대진	김창수	박한승	오철환	이정웅	조동환
노병일	변미애	유현지	이중석	차성미	고형석	김현	배백호	엄창수	이정학	정환재	강승수	박응도	장기태	성광문	이상춘	민경환	조승현	김도영	김천일	배기만	우동락	이중경	조락현
노신복	변한주	유홍우	이필상	차정운	공수현	김현모	배용태	여상구	이종성	조광득	강신용	박재욱	장도익	심규만	이석진	박경자	조용문	김도한	김태선	배경길	우형택	이지영	조방희
노용래	서방자	유희경	이현우	찾는이광명교회	곽상희	김현석	백석	오경례	이종택	조교영	고영호	박정구	장문석	양창진	이선덕	박광근	조용식(명신한의원)	김도형	김태수	배석운	유성근	이진태	조상재
노혜숙	서삼례	윤문선	이혜수	최경화	구희선	김현중	백영기	오승용	이창호	조성식	구자근	박주영	장세광	영광자동차공업사	이순애	박병돈	조종석	김도형	김태우	배은정	유성호	이진현	조영도
노희준	서순자	윤승형	이혜진	최도애	권중화	김현철	백익순	오승재	이학균	조승유	권구일	박형진	장종길	원우환	이유실	박상식	박재현(명진아파트)	김동석	김태환	백승호	유영환	이진희	조용원
류미숙	서용원	윤종미	이호석	최문교	기우태	김형준	백종기	오영수	이형호	조재근	권보	박희중	장준우	이현	이희재	박영훈	채신덕	김동일	김해철	변규현	유양근	이창용	조인지
류숙경	서유리	윤진원	이호열	최미곤	김경현	나미영	버스조합	오영진	이호진	조현지	권순서	백승국	장훈성	임용선	임구원	배건웅	최영미	김명수	김현수	변부형	윤동섭	이태용	조정학
류정희	서은경	윤철	이호성	최미영	김광영	나병철	변동철	오지혜	임가춘	조형수	권순형	변창우	전유한	최웅	장순환	백종일	최재웅	김명혜	김형수	서경대	윤현식	이해숙	조진현
마이인	서이석	이강순	임상례	최상철	김기보	나성영	변원섭	오지홍	임동훈	주경남	권윤택	소평진	전재돈	한광수	정경조	신명순	한성식	김무중	김효진	서정걸	윤홍식	이형태	조찬호
민찬식	서태원	이금숙	임진희	하숙례	김기봉	류한범	변재영	오지홍	임성태	주호연	길윤옥	송장호	전호갑	한화에너지	정태영	신상천	한재혁	김문한	나승춘	서정욱	이강태	이호석	조창래
박경옥	석학주	이기영	정영기	한금희	김기홍	류한호	서민호	유방실	임숙경	지명순	길호양	송철원	정제봉	홍관표	조용석	심상용	한해경	김문희	남동강	서종철	이경란	이희영	주태환
박계량	성윤경	이길숙	전광섭	한윤선	김길현	명노민	서상기	유현	임영범	지병근	김경훈	신미정	정진수	홍기원	조은정	안호열	허우섭	김민석	남운환	석정태	이경오	임종오	진성학
박광수	성인숙	이로사	전종석	한홍기	김남수	모현숙	서상기	윤두중	임옥주	차현승	김도형	신주식	정택균		조재용	양영재	홍석만	김상돈	남인철	성광기	이경탁	장석희	진연수
박기은	손선주	이말복	정기선	허기용	김동준	문병규	서수연	윤봉란	임정훈	채인기	김동욱	심재필	정택동	군포경실련	지성애	여중석	황인문	김상용	남정근	성수환	이경화	장영규	차진근
박미경	송쌍옥	이명숙	정도환	허정규	김동현	문정찬	서재수	윤용영	임정휘	천일용	김동환	심정규	조경래		차숙희	엄선덕	김상진	노영희	성영락	이광오	장우석	천홍석	
박미영	송혜정	이미경	정민정	허정호	김문수	문해옥	서재형	윤석구	임종수	천재영	김문환	안세찬	조동현	곽윤열	최경용	오미애	대구경실련	김석동	노윤경	성윤상	이근원	장은숙	최동학
박미정	신귀분	이미선	정병만	허정은	김미남	박광복	서정훈	윤영수	임종연	천형욱	김보준	양남숙	조현수	국정아	최충식	오인순	김석태	류규하	성찬환	이기훈	정철규	최수진	
박민관	신동렬	이미희	정병오	허창순	김병철	박남규	서해자	윤원진	임종철	천홍석	김봉교	양진오	지대근	군포위생	한성수	오흥미	(주)내부유니캐이션	김선왕	류학근	손광락	이노수	장해열	최우곡
박민영	신민선	이민지	정상영	현지혜	김상국	박만규	선종아	윤홍성	임한필	최남식	김연고	엄상섭	최근애	(원석회)	호희국	웅심이칼국수	감신	김선희	맹일영	손상호	이덕우	장호경	최원아
박복임	신복인	이병렬	정선유	홍선영	김성일	박미경	설상옥	은광석	임형재	최주영	김요나단	윤달근	최선호	김대욱	김포경실련	유영록	경희창	김성수	문인수	손승완	이도현	전상훈	최종만
박상윤	신선영	이병순	정애숙	홍은선	김수영	박병규	성인규	이강천	임형철	최준영	김윤희	윤상훈	최연호	김동별	윤명자	공영선	김성준	문효상	손영호	이명호	전성욱	최준호	
박성배	신성은	이병철	정은영	홍진호	김순재	박병기	소범환	이기만	장시영	최진규	김은희	윤종석	표상옥	김석현	(주)신원렌터카	윤상연	공재식	김성택	박갑석	송순임	이미정	전영권	최한경
박성영	신영옥	이복자	정인애	황동식	김양두	박병일	손성만	이길남	장익수	하성택	김인순	이관순	하영백	김연승	강명자	이경화	곽덕환	김수원	박경옥	송영식	이병화	전영선	최한석
박승원	신윤철	이부순	정중환	황인란	김양지	박상원	손점식	이동민	장익	하은이	김재욱												



최혁재	김영주	박혜영	유인수	정대용	강병국	김태현	박혁진	이찬식	최일	고명석	김병기	김영춘	김진필(2)	문상철	박정숙	서종석	신만석	양지현	윤재성	이성훈	이현우	정달식	제미경
하경태	김영희	박희조	윤여진	정상훈	강병조	김판조	박현희	이천호	최재경	고인홍	김병용	김영태	김진현(2)	문윤순	박종덕	서창근	신병훈	엄세원	윤재철	이성희(2)	이헌제	정도영	조래영
하순화	김욱	방명덕	윤주병	정상희	강성태	김하성	박혜영	이철수	최종명	고재일	김병하	김영호	김창희	문재천	박종석	서현수	신상구	엄호천	윤정선	이순정	이현주(3)	정동만	조명래
한상인	김원희	방정희	윤태희	정승래	강영태	김홍석	박홍식	이한경	최효길	고정연	김보열	김왕의	김철도	민지훈	박중수(2)	서현식	신상해	오병루	윤종관	이승준	이혜영	정동영	조명제
허남렬	김은주	배동국	이건희	정예성	강제석	김희환	배상기	이현중	최환석	공병승	김복준	김용섭	김춘덕	박경주	박주원	서효정	신수진	오상준	이갑준	이승호	이훈진	정말순	조문선
홍순기	김용배	백미옥	이계자	정우택	강주천	나지애	배영철	이형오	하상복	곽원병	김봉국	김용원	김태경	박관수	박준순	석승희	신승균	오상환	이강진	이시화	이희길	정명길	조민주
홍희청	김인철	백정웅	이광자	정인구	곽경배	노경운	백재룡	이홍성	홍간숙	구경희	김봉규	김용필	김태구	박국순	박진성	석진열	신영호	오세룡	이경학	이영갑	이희전	정명식	조봉수
황광석	김재경	서동국	이광진	정중훈	권인철	명근홍	서이채	임종석	홍국선	구명중	김부근	김원태	김태우	박길호	박찬일	석태호	신용현	오연석	이광열(2)	이영신	임무진	정명영	조삼현
황귀선	김재석	서영석	이동민	정현재	김경욱	모창용	손미란	장미	홍근표	구주영	김분이	김유경	김태원	박남희	박철중	선다윗	신유천	오영자	이광원	이영호	임용호	정명희(2)	조상희
황락규	김제선	서영완	이문지	정희대	김경철	문영덕	송미승	장종국	홍석준	구효승	김삼문	김유석	김학진	박도영	박철한	선석렬	신이건	오지영	이귀순	이영훈	임우택	정문수(2)	조성렬
황병일	김종구	서재열	이범규	조성천	김관욱	문웅	송영중	전종국	홍순길	국희원	김삼수	김윤영	김해몽	박도현(박해성)	박태주	설광석	신정희	오철조	이규현	이옥형	임종수	정미경	조실제
황정현	김종선	서정원	이병승	조신행	김광배	문준석	송진호	전철균	홍진표	권명섭	김상길	김은숙	김해영	박동범	박현규	설호석	신철성	오태석	이남기	이용주	임호	정미영	조양래
황종숙	김종천	서형호	이상국	조용석	김광창	민경준	송홍범	전철영	권범현	김상배	김상옥	김은영	김현영	박동석	박현욱	성덕주	신총기	오현주	이남중	이원경	장귀봉	정미한	조영규
	김종하	서희경	이성일	조윤제	김기권	민찬홍	송희진	정남준	부산경실련	권오성	김상옥	김인한	김현옥	박두춘	박희영	성민수	신해송	옥성애	이덕식	이우덕	장다갑	정민재	조용규
<b>대전경실련</b>	김주홍	성기석	이승복	조은호	김대근	박강일	신관용	정명오		권외분	김상태	김인환	김현재	박명식	박희정	성병창	신향남	옥진우	이도준	이은진	정문숙	정상문	조용언
	김진숙	손대근	이승용	조철휘	김명숙	박광배	신재범	정병수	(주)경성에너지	권재현	김상호	김장섭	김형권	박명자(2)	박희정(2)	성영미	신현우	왕인	이동률	이은화	정문정	정순영	조용우
강다운	김진중	송영환	이영수	조항범	김명진	박근영	신주환	정삼수	(주)부산은행	권태섭	김석준(2)	김재만	김형균	박미순	방성애	손병열	신혜숙	우명자	이동원	이은화(2)	장봉주	정순일	조용한
강명자	김창근	송유숙	이용훈	조혜형	김명철	박나영	심재경	정승임	강경태	길태호	김석호	김재명	김혜경	박미순(2)	방욱자	손봉주	심미예	우성철	이동윤	이윤찬	장성채	정신모	조유장
강병규	김춘길	송인걸	이윤행	주정봉	김문재	박석일	안영하	정영창	강규성	김가야	김선년	김재일(2)	김혜경(2)	박미영	배광효	손상용	심상조	우정용	이동일	이재정	장성호	정애니	조윤득
강재규	김홍신	송재근	이인세	정문준	김미주	박석일	양명희	정준기	강대영	김갑환	김선미	김재찬	김호범	박민우	배덕광	손순용	심성구	원허	이동진	이재호	장영철	정영점	조윤환
고나현	김태연	신창호	이재영	진동규	김민희	박석진	양승희	정진대	강미라	김경숙	김선희	김재훈(2)	김홍재	박복용	배성훈	손영일	심윤정	원희연	이동훈	이정민	장용진	정용성	조은아
고제열	김태현	신현진	이정구	차정민	김보현	박세훈	양영주	정평국	강민석	김경일	김성권	김정각	김홍희	박봉수	배수미	손정현	심인섭	유명길	이동희	이정식	장윤석	정용수	조은정
고희경	김태형	신희권	이정호	최경호	김상원	박소영	양판승	정혜수	강민수(2)	김경조	김성근	김정량	김후송	박상영	배애정	손정환(2)	심형철	유미진	이만수	이정주	장은선	정우루	조재형
구남혁	김태호	신희영	이중범	최경훈	김선미	박송춘	어성준	정호원	강민정	김경택	김성길	김정민	김훈태	박상수	배용준	손창욱	심해인	유수윤	이명식	이정향	장재구	정우진	조종석
구범림	김태훈	심영주	이지영	최나구	김선실	박소옥	오승주	조기석	강병석	김광식	김성수	김정수(2)	김희곤	박성조	배종출	손창우	아영아	유영명	이미경	이정호(2)	장준흠	정은선	조지혜
권철명	김현조	안광정	이창기	최미경	김선홍	박송채	원요준	조미경	강병호	김기태	김성열	김정숙	나성린	박석원	배혜래	손치훈	안기영	유완식	이민호	이정환	장지태	정장한	천상수
김갑용	김현하	안병진	이철은	최봉문	김성두	박송옥	유경생	조상국	강삼욱	김길수	김성웅	김정순(2)	남경태	박선민	배화숙	송교욱	안도호	유재기	이병기	이정훈(2)	장차남	정재동	천용욱
김경훈	김형태	안영찬	이학재	최우석	김성철	박영용	유광호	조성익	강성권	김남식	김성춘	김정택	남기찬	박선아	백대영	송문숙	안명석	유재엽	이병진	이재숙	장해욱	정재호	천정호
김기범	김혜천	안재준	이현대	최장환	김성태	박용목	윤치술	조순형	강성태	김남일	김성태(2)	김정현	남영현	박성수	백평효	송미경	안문상	유재중	이병호	이조경	장희정	정종학	최의수
김기오	김홍숙	안종대	이현숙	최정우	김수경	박인용	이덕일	조영교	강시명	김대래	김성호(2)	김중곤	노경조	박성철	백혜랑	송상연	안병록	유정기	이봉주	이종석	전보익	정종화	최거훈
김길순	도남선	안종훈	이현호	한경이	김승호	박인철	이도홍	조영석	강예윤	김도	김성훈	김중구	노상훈	박성호(2)	변영호	송숙희	안연균	유정동	이봉진	이종원	전세표	정지원	최규덕(2)
김동선	명을식	오상철	이형복	한기평	김신규	박정석	이명희	조용호	강유동	김도용	김성훈(3)	김중기	노영욱	박성훈	변재우	송순임	안원하	유재현	이상구	이종철	전연숙	정진걸	최남연
김명경	문경재	오세윤	이화영	한성림	김영태	박정희	이문희	조인수	강유창	김동명	김세한	김중민	노일용	박승제	부두봉	송원섭	안원호	윤강훈	이상미	이종학	전용배	정진교	최달용
김명제	박경오	오세현	임경수	한성숙	김영환	박종두	이범수	조준범	강재현	김동현	김수미	김중현(2)	도환영	박시우	서경국	송은주	안재민	윤경만	이상백	이주환	전우철	정창성	최민식
김명주	박근영	오원관	임상일	한화교	김예영	박종범	이병채	차경아	강재호	김동호	김수빈	김주영	류강렬	박영강	서경숙	송재광	안종일	윤기혁	이상은	이준승	전일수	정창화	최병근
김문영	박기남	오종섭	정명욱	홍승원	김정민	박종석	이상권	천병식	강정규	김동환	김수자	김주현	류봉호	박영봉	서만석	송재은	양대건	윤나영	이상진(2)	이진수	전정호	정준희	최병찬
김병국	박상훈	오학석	장복수	황의달	김정아	박종철	이성로	천재관	강주하	김명석	김쌍우	김주호	류위훈	박영현	서영대	송정숙	양동열	윤상근	이상탁	이진수(2)	전진영	정치금	최보규
김상환	박성진	우금욱	장춘순	황재익	김중숙	박주이	이영춘	천현중	강중묵	김명섭	김영길	김주희	류은영	박용주	서영립	송종두	양시경	윤상미	이상현(2)	이창희	전현수	정평영	최부환
김성민	박영순	원용철	장형근	황해정	김중익	박창수	이유리	최명숙	강태문	김문규	김영수	김준기	류종성	박용한	서미화	신경근	양원석	윤상현	이선희(2)	이창재(경성유업)	전호열	정태호	최신아
김성태	박종대	유배근	정화식		김중호	박창윤	이인수	최병기	강필원	김미향	김영아	김준환	류진호	박재분	서범수	신군재	양은진	윤석준	이성권	이춘구	정광현	정하윤	최성관
김성민	박종석	유병연	전국진	<b>목포경실련</b>	김창세	박철수	이재광	최연식	강현주	김백철	김영욱	김진	모상선	박재욱	서봉원	신대량	양재화	윤성미	이성림	이춘성	정광연	정한성	최수미
김양호	박준혁	유병한	전영춘		김춘길	박한호	이정진	최완수	강형숙	김범준	김영욱(2)	김진영	문규성	박재현(2)	서수금	신동욱	양종철	윤수성	이성열	이학봉	정근	정해균	최수영
김영기	박준형	유인규	전혁구	(유연의)실종민사연	김태중	박해영	이중화	최인권	경규성	김병곤	김영중	김진찬	문명순	박재홍	서양수	신동윤	양종필	윤영태	이성형	이현민	정기섭	정해영	최승환



최영주	홍봉선	김문석	김종윤	박웅기	장진욱	이봉진	전영식	함국기	김봉균	김해숙	서경희	이국희	이희숙	허윤화	이복남	김미영	도원중	심규호	이혜나(하용녀)	박은정	이용성	여수경실련	
최원석	홍일표	김미녀	김주철	박정민	양해준	이상식	전용성	함준식	김석규	김희웅	서상범	이금희	임용순	허재구	이상희	김민	류영숙	양근서	이희대	양평경실련	박장수	이용열	
최원웅	홍종인	김미정	김준섭	박종갑	어주하	이상정	전이령	허우린	김석진	김효근	서수정	이길영	임혜경	허현대	이욱기	김병재	류홍번	양태호	이희연	박현일	이의협	GS칼텍스(주)	
최은석	황국자	김병욱	김진태	박종학	엄경선	이상호	정문교	홍연암	김석진	김훈	서정근	이명욱	장명욱	홍영호	이종철	김복희	맹정임	양현석	임명자	강대우	방민경	이제두	강규호
최은주	황보승희	김부석	김진태	박종현	엄천수	이수영	정봉재	홍명관	김선혁	나민수	서정욱	이민구	장성근	홍중수	이천오	김상혁	문강섭	여만식	임수정	강병국	배만병	이지연	김미성
최이량	황영식	김상기	김진희	박종훈	엄태영	이승재	정상철	홍인숙	김성란	나태성	서환	이범주	장점숙	황경희	이휴정	김석용	문버들	오관영	임현규	강신우	배연정	이철규	강성훈
최인한	황인구	김선일	김진희	박준범	오관영	이연우	정성근	홍전희	김성연	남기석	서홍석	이병홍	장점오	황민석	임승규	김성봉	문연숙	오남숙	장동근	구민진	서동일	이홍록	강용원
최재명	황인석	김선철	김천수	박희식	오광택	이열호	정순희	홍천동	김시영	남상덕	성기원	이상명	장현주	황성우	장동식	김세원	박경용	오은석	장동일	권수연	서시은	이희연	고용국
최재호		김성권	김철수	반영덕	오모현	이영선	정양언	홍해용	김안식	남창현	성현구	이상해	전희락	황용원	장문석	김송철	박경중	오정순	장미진	권오병	서영균	임다정	공성식
최정목	속초경실련	김성근	김철환	방대식	오승택	이영수	정용주	황보해용	김연기	남택진	손해정	이성호	정계화	황지숙	정순관	김안식	박경태	오진호	전준호	김경수	서진숙	임승기	곽현철
최종해		김성미	김춘삼	변성수	오윤택	이영순	정원모	황시영	김영기	명홍진	송기돈	이성희	정성균		정옥석	김영림	박금자	오현주	정명숙	김경희	성종규	장석준	권욱
최준식	(주)강원으로	김성욱	김춘식	변인미	오홍월	이우영	정윤희	황영필	김영래	모성은	송기진	이수행	정수진	순천경실련	정은희	김영숙	박기욱	오현주	정세진	김광배	송명원	장승희	권인홍
최찬규	강동우	김성울	김종남	서관우	원선목	이운연	천성미	황은숙	김영수	문순심	송원찬	이승호	정순옥		주지은	김영희	박동신	왕은희	정승현	김광윤	신민희	장영달	권진구
최철원	강미심	김세형	김태균	서영기	원은주	이은희	천성필		김영일	민경록	신동섭	이영인	정순혜	강성민	최효숙	김윤재	박상근	원미정	정안철	김대우	신순봉	장은혜	김동식
최현돌	강석태	김수근	김태영	서은진	유성봉	이인숙	최관식	수원경실련	김영태	박동선	신지훈	이영재	정양훈	강철호	한지은	김윤희	박상호	원호식	정연주	김동은	신승환	전미옥	김동채
최해경	강신길	김수정	김형걸	석영환	유영민	이재선	최근석		김완동	박민철	신한미	이영주	정연규	김미정	현고(임승남)	김은주	박성진	윤상민	정용기	김동현	신정원	전승희	김미순
최희원	강영희	김순복	김형기	선영복	유영창	이재정	최길순	(주)형원건설 - 최영욱	김용로	박세준	심재광	이용호	정원제	김선명	홍상우	김정란	박승렬	윤성웅	정은수	김명숙	신희정	전재은	김성춘
탁영민	고든일	김소봉	김호준	소문섭	유종완	이재홍	최돈환	김미경	김용석	박순례	심현자	이운창	정자홍	김성준	황금영	김정복	박은호	이갑순	정은식	김명주	안경모	전재현	김숙자
하경민	고석철	김승길	김희근	손병섭	유주희	이정하	최동권	강민철	김용일	박승원	안혜영	이원욱	정중훈	김윤아	황의병	김정숙	박정희	이갑숙	정은혜	김명희	안영일	전종덕	김영표
하나연	고선창	김승숙	남상진	손재복	유철중	이종섭	최동훈	강유정	김용철	박영양	양우혁	이원재	정태정	김중선	황인선(광과원)	김제동	박종숙	이경란	정이진	김민섭	안은경	정경숙	김유성
하상철(2)	고영진	김승철	노금희	송경희	유해정	이종식	최서호	강인선	김용	박원기	양재철	이윤희	조경두	김중욱		김종길	박종호	이경석	정정순	김민정	안정희	정남선	김정선
하성훈	고인선	김시형	동병희	송은희	윤광훈	이종식	최성주	강학천	김은하	박용환	양진하	이의봉	조규만	김준호	안산경실련	김종일	박준연	이경진	정주호	김석채	엄숙자	정연준	김종구
하소영	고종문	김영석	라용일	송제철	윤규식	이주연	최승영	강희정	김인석	박원호	염규용	이재득	조규호	김지훈		김지영	박태순	이근미	정진욱	김선자	여병찬	정영수	김항우
하순금	고현주	김영식	문재용	송중철	윤기순	이종길	최애리	강희진	김재기	박윤환	예인기	이재우	조금현	김태호	강경호	김지훈	박해부	이미숙	정철욱	김수은	여현정	정주영	김현태
하주수	공정관	김영아	민현정	신대섭	윤신남	이진여	최영미	고기준	김재성	박익중	오동석	이재준	조병모	김필래	강기성	김창모	박희경	이미숙	제종길	김양수	염충	정하성	나형선
한국물리공업(주)	곽병용	김영호	박경미	신선익	윤재훈	이진형	최용석	고병역	김정욱	박재관	오민범	이정원	조석환	김현덕	강수문	김창하	방은경	이민근	조경래	김영범	오성택	조경송	문상엽
한기성	곽종환	김영화	박경심	신영근	윤재희	이철	최유정	구본숙	김정희	박재순	오세환	이정하	조승백	김혜선	강수진	김철진	백영국	이벽희	조안호	김용관	유영표	조소연	박병규
한미영	길목	김용일	박경자	신재민	윤정은	이태열	최종현	권윤희	김중석	박정화	오완석	이종령	조영춘	나창수	경창수	김철환	서근식	이병욱	조재기	김용준	윤덕규	조재국	박성현
한병무	김 철	김원기	박계화	신종출	윤준	이필선	최지문	권후남	김중선	박제현	오일웅	이중만	조은석	매일식품(주)	고관	김초환	서정열	이상현	조충현	김정화	윤수영	조춘선	박숙희
한병철	김 철	김원일	박근철	신창승	이건욱	이필순	최진철	김경수	김중오	박주영	오지현	이중주	조형훈	박광호	고미나	김춘옥	서혜경	이선숙	주만수	김주남	윤정원	조항욱	배선주
한성국	김경석	김유경	박덕희	신현식	이경호	이현녀	최준파	김경호	김종환(김종환건축사사무소)	박준배	오해경	이주연	조화윤	박병희	고영인	김춘호	석진성	이선희	최경숙	김지혜	윤종대	조현주	서영남
한성안	김경순	김유리	박만웅	신홍식	이경상	이현미	최택수	김기한	김준혁	박진순	우양미	이주현	주영훈	박재현	곽도훈	김태훈	설점순	이숙경	최복수	김진영	윤형로	조효미	서진호
한영수	김경아	김은희	박명중	신홍사	이경애	이호석	최형덕	김도형	김지환	박태경	유상철	이진성	지수이	박재성	곽태영	김해만	성준모	이숙란	최영화	김창현	이그루	진광규	서호영
한재철	김경원	김인선	박문수	심삼옥	이관	임정길	최해경	김동선	김지란	박현웅	유상태	이찬웅	진송주	박철우	권태근	김현삼	손상경	이양주	최윤정	김현일	이길한	채 현	성수미
한종석	김계남	김일환	박병훈	심연흠	이기원	임종희	최효섭	김동원	김진한	박형순	유재성	이창모	최문태	비손이앤씨	김경숙	김현호	송기범	이옥례	최임이	김햇님	이대형	채풍목	송승하
합라연	김나영	김재학	박상준	심화섭	이대길	장경민	추종권	김말순	김철환	박화진	유제상	이창진	최석환	서용현	김경애	김형욱	송민아	이용진	최재림	김현진	이동연	최갑주	심경택
허민도	김남춘	김정수	박성진	안경수	이대복	장근호	탁동철	김미선	김홍관	박홍덕	윤귀현	이판수	최영숙	신현일	김기범	김해숙	신광재	이용천	최현수	김후승	이명규	최경호	심재수
허옥경	김덕용	김정식	박성한	안경자	이돈섭	장명석	평화산업 전문숙	김미옥	김태선	배금란	윤남권	이필근	최영희	영신창업투자(주)	김기희	김혜영	신남균	이정미	하혜경	노국환	이병은	최두영	안성웅
허진욱	김동수	김정아	박세찬	안세준	이문규	장봉주	하성란	김미정	김태학	배창수	윤두천	이한규	최인수	오정록	김대일	김호득	신동국	이정아	한미현	문희정	이상건	최석운	오경섭
허해녕	김동순	김정인	박수경	안종석	이문성	장성원	한살림	김민수	김해영	백승유	윤미경	이해균	최인자	위미영	김동인	김화궁	신병철	이주옥	형천호	박민기	이수진	최소영	오상경
허현도	김말순	김정환	박승민	안종원	이문영	장은선	한상민	김민수	김현구	백혜련	윤희경	이현순	최종후	유영필	김명연	나정숙	신윤관	이창수	홍경남	박수완	이승용	최영식	오승석
현지훈	김영섭	김정훈	박영덕	양언석	이미경	장재환	한성희	김민혁	김현태	변수정	이경섭	이호주	최진학	윤석미	김명희	남기순	신장환	이찬환	홍장표	박순영	이연호	최영준	윤주현
홍경자	김명옥	김종담	박영희	양영희	이병선	장주열	한정숙	김백규	김혜련	변영선	이경환	이희수	허성균	이금호	김미경	남정애	신청하	이필상	황연화	박옥경	이연환		윤현희



이문식	구지은	김성훈	김정진	박경미	배재준	심형모	유승열	이병석	이주윤	장원주	조종성
이수현	권광일	김선우	김정천	박기영	배정수	안미숙	유영숙	이복수	이준호	장재훈	조철현
이식	권순원	김선일	김종복	박기환	배중열	안병운	유재경	이부경	이중재	전미숙	조춘순
이영재	권영미	김선희	김종원	박영순	백응기	안봉섭	유재춘	이상년	이진관	전상진	조택선
이유형	권영진	김선희	김지혜	박명철	변영구	안신실	유태무	이상원	이진혁	전성호	조택선
이종원	권영훈	김성국	김진수	박병건	변정해	안재영	유학선	이상태	이찬우	전영석	조한영
이철	권오섭	김성국	김진영	박병대	변정해	안정민	유해란	이상혁	이창규	전영애	조휘명
이평호	권오주	김성길	김진용	박상옥	부태길	안창호	윤광석	이석환	이창수	전홍구	주상운
이학철	권진형	김성애	김진창	박상용	빈종진	안철한	윤남선	이선	이창수	정병관	주상운
임호상	권혁봉	김성완	김진천	박상임	빈종진	안형동	윤남용	이선정	이천수	정선옥	지소연
장준배	권혁왕	김성재	김진천	박상철	사단법인에이트창업	양정분	윤미애	이성규	이철희	정성기	지정철
정대훈	권혁중	김세동	김창균	박선규	서성원	양희진	윤수영	이성훈	이춘석	정순현	지효숙
정승환	권흥석	김수동	김창수	박선영	서원교	어경숙	윤수영	이순창	이종일	정승수	진선종
정정식	권흥석	김수현	김춘자	박성희	서은숙	어덕경	윤준호	이승남	이종환	정용희	진용상
정주현	금청하	김순업	김태진	박수자	서재호	엄기홍	유태범	이승현	이판용	정육형	차동환
정차섭	기보중	김순업	김학경	박양래	서정순	엄태준	유태범	이양순	이학수	정유리	차준은
정치훈	김 준	김연희	김학재	박옥선	서희숙	엄태희	윤향숙	이영구	이한표	정윤지	채봉수
제성명	김갑용	김영근	김현미	박인	성주영	엄희용	윤혜숙	이영섭	이해철	정윤희	채홍철
제윤경	김강산	김영자	김현숙	박인오	성희연	여재혁	윤희태	이영우	이현호	정은영	천기영
조현혁	김경건	김영자	김형식	박일엽	손경자	여한수	은종원	이영현	이현희	정은희	천병기
주춘	김경률	김영준	김형진	박재선	송경은	오근철	이강문	이영훈	이호영	정인우	천재영
천상국	김경림	김영찬	김호열	박재우	송영득	오금석	이강수	이옥희	이호일	정일구	최근우
한병세	김경자	김영철	김홍태	박전희	송영득	오동석	이경수	이용근	이훈	정정순	최대규
한해광	김경중	김영춘	남기태	박전희	송은주	오명환	이경수	이용만	이희상	정진웅	최동규
홍춘식	김경화	김예린	남오철	박정하	송이식	오병재	이경호	이용연	임명원	정진학	최명섭
	김광수	김옥자	남오철	박정화	송정호	오석호	이경화	이우정	임선미	정춘화	최병주
이천여주경실련	김광수	김광근	남용대	박종구	송준규	오성순	이광석	이운용	임성규	정하근	최병탁
	김광식	김용식	남천우	박종오	송창신	오성용	이광세	이윤숙	임성식	정혜순	최복순
강경모	김광인	김용태	노필순	박종옥	신계영	오세린	이광윤	이은자	임승한	제영기	최상동
강석림	김금녀	김우재	노필원	박종모	신덕선	오형선	이광재	이의성	임영길	조경국	최성원
강성수	김기석	김은경	류성민	박진형	신동신	우근배	이광호	이이슬	임은혁	조계만	최옥명
강승균	김기열	김용제	류시근	박진형	신동윤	우순애	이교관	이익재	임자희	조길문	최용철
강신욱	김기은	김은이	마상호	박창근	신동천	우순희	이구현	이재범	임철만	조남술	최은실
강영애	김기태	김은하	마석훈	박창근	신두임	우종만	이기훈	이재성	임철재	조병돈	최인근
강정순	김길홍	김의섭	마석훈	박창렬	신영호	우현녀	이길수	이재용	임현권	조생남	최인식
강창영	김대록	김인기	마세진	박태문	신원재	원경희	이길윤	이재학	임혁빈	조성복	최재화
고경애	김대축	김재순	마애진	박태문	신은순	원용식	이길윤	이정길	임희욱	조성숙	최정관
고옥자	김두환	김재임	목현실	박영국	신종옥	원용자	이대현	이정숙	장경자	조성화	최정숙
고윤지	김미혜	김재홍	문미자	박홍재	신종옥	원종수	이명신	이정숙	장교환	조연숙	최정화
고인정	김병기	김정범	문승욱	박희자	신철승	원종순	이미희	이정형	장여진	조용월	최종
공미선	김병수	김정분	문연래	박희자	신해진	유경윤	이박우	이종송	장영란	조은미	최종
구경혜	김봉덕	김정수	민승래	반기숙	심관보	유상열	이백선	이종원	장왕영	조정래	최종악
구준모	김상실	김정진	박경룡	배경희	심규대	유상희	이병석	이종한	장원섭	조정숙	최준봉

최현희	황진선	김경호	김영준	남홍우	박한정	신종한	이길성	이행숙	정승권	표현호	김용권
하명수	황현숙	김계원	김용구	노국진	박홍열	신희식	이다빈	이현경	정승연	하석용	김용휘
하정순		김관호	김용모	노승환	박홍철	심재선	이덕환	이현석	정연중	한국노총인천자부	김장기
하태길	인천경실련	김광업	김용미	도영운수(주)	방수환	심정순	이도희	이현준	정원경	한국노총연인천자부	김정길
하헌홍		김광호	김용민	도지성	방정환	새(인)우인(태)세(주)	이동기	이형구	정은식	한기남	김중원
한국전력	(사)인천경역사마을회	김균률	김우경	류권홍	방종실	안경수	이동현	이형수	정재영	한만승	김주희
한덕이	(사)한중기대리협회	김근영	김원화	류병희	배성수	안동찬	이루다	이혜정	정재윤	한창원	김혁수
한덕이	(주)디씨알이	김기한	김운태	류재홍	배승휘	안병준	이린우	이후삼	정지은	한창인	김형식
한돈집	(주)선광	김남든	김은경	마효술	배철현	안재균	이문의	이흥우	정진수	한창현	리형연
한만준	(주)인연애자최종옥	김대중	김은영	명선목	백동수	안희섭	이범열	인천YWCA	정진오	함문숙	류충성
한상화	(주)한성라인	김덕중	김은환	명창준	백민섭	양광범	이병기	인천대총동문회	정창훈	함지현	박규만
한상화	(주)해룡	김도현	김은희	목동훈	범아겸수(주)	양희석	이병철	인천상공회의소	정종의	함창학	박명수
한순택	(주)화정엘엔티	김동완	김응철	문상범	변성준	엄연주	이상동	인천예총(김재철)	정원교	허도병	박명진
한영순	강경하	김동우	김인수	민근홍	변태수	여승철	이상영	인천재평변호사회	정희윤	허우범	박복희
한영옥	강덕우	김동호	김재경	민동식	봉성범	여정주	이상진	인천행복시대	조광희	허주형	박상민
한은상	강명선	김두영	김재식	민태운	새(인)인(태)세(주)영동운수(주)	이상훈	인천항만연구원	조난주	허창희	박양림	
한은상	강명수	김명석	김재영	박경호	사단법인	오경환	이성한	임강민	조동암	홍애경	박인선
한재수	강상근	김명제	김재욱	박기욱	무지개	오승한	이순민	임병구	조병혁	홍옥표	박효민
한정민	강석	김미경	김종길	박미진	서경옥	오원선	이애경	임승관	조영희	홍유나	송악용
한정현	강석철	김민배	김종욱	박민서	서광춘	유동현	이연숙	임준택	조용철	홍인성	신태용
한준학	강승진	김병우	김종호	박상문	서부길	유재진	이용우	임채훈	조용화	홍인식	신희라
한준호	강옥엽	김병철	김종호	박상필	서용성	유지상	이용준	임현준	조우성	홍희경	심동희
한준희	강정호	김봉수	김중화	박상희	서재송	유진성	이은정	임희숙	조원민	황덕성	안수현
한희자	강태경	김상길	김준우	박석민	서주선	유창민	이의재	임희진	조인숙	황석광	안정훈
함연자	고덕봉	김상섭	김진영	박선영	서태원	유필우	이인철	장영현	조자영	황수연	양영희
함연자	고재성	김상열	김진태	박성인	서해동	유홍성	이일희	장일진	조현경	황용선	양창훈
허림	고정규	김선홍	김진희	박수영	서해안	윤관옥	이재필	장정민	조현준	황은우	엄상섭
허범석	고태성	김설	김창우	박순옥	석일	윤대기	이재학	전경희	조희선	황제우	오상현
허수행	공규현	김성근	김태호	박시우	성기진	윤동구	이재훈	전현준	지영일	오영근	
허임범	곽안나	김성수	김태훈	박신숙	성덕규	윤명철	이정림	전동춘	최병길	전주경실련	유창엽
허임범	구자길	김성태	김하은	박옥희	성용원	윤미경	이정윤	전영우	최병윤		윤영수
허준환	권경자	김세훈	김현식	박용해	손병옥	윤미선	이종일	전영진	최상희	강원균	윤철용
현주섭	권남구	김수만	김홍섭	박윤수	손장원	윤월성	이주영	전용성	최성원	강창수	윤태영
홍경아	권대현	김수자	김희연	박인옥	송경희	윤지의	이주용	전우진	최성진	강호수	은영주
홍성동	권명희	김승남	나영우	박정남	송기태	윤호	이주희	전준권	최인용	곽기우	은응우
홍원표	권미정	김승희	나종팔	박종석	송문성	윤희택	이준한	정규식	최정자	권미경	이기화
홍은하	권오경	김시철	나종훈	박종효	송원덕	이진준	정기호	최정철	김대기	이민호	
홍종민	권오연	김연옥	남세중	박준용	송인선	이강훈	이찬우	정낙식	최준혁	김만식	이보향
황경애	권용희	김연옥	남승용	박진석	송한철	이경진	이창숙	정두용	최찬용	김병석	이선미
황규문	권정호	김연중	남영우	박찬대	신나영	이경호	이창운	정미경	최현	김성식	이승현
황규문	김갑봉	김영구	남종희	박창화	신병철	이귀복	이창훈	정석조	최혜자	김성주	이영식
황인동	김경원	김영국	남지승	박태선	신영은	이기원	이철준	정석환	최화영	김수태	이정춘
황인재	김경태	김영수	남창섭	박판순	신은철	이기태	이한용	정선오	폼솔	김수환	이재운



이점수	김진평	고봉석	김영희	오영익	고영술	박종례	장재식	강민	김광성	김수환	김응철	김현숙	류재호	박용석	변만수	송태성	안창만	오훈영	윤한식	이선순	이종한	임일수	정상용	
이정	김택술	고봉수	김용범	오영환	구본영	박종복	전승례	강민오	김광직	김수환	김인숙	김현주	류진호	박용연	변만수	송태화	안태희	우상동	윤현우	이선우	이주인노인센터	임재경	정상현	
이현희	김현	고상봉	김우준	오정훈	구자형	박태서	전오진	강병용	김광희	김숙자	김인자	김현진	류찬걸	박익규	변상태	송필수	양계인	우장명	윤혜정	이선희	이주봉	임재규	정성래	
임규삼	김현	고석건	김원규	오창현	금명기	박현희	전종한	강석형	김교선	김순구	김일경	김형우	류학천	박인규	변상호	송해근	양기정	우정순	윤호영	이성민	이주선	임종승	정성희	
임명진	문성대	고석봉	김원삼	유덕현	김경은	백우현	정미영	강선희	김국환	김순영	김재복	김형창	류현숙	박인성	변성민	송효현	양기춘	우진교통(주)	이기빈	이수복	이주형	임지은	정수창	
임성진	문정수	고성봉	김익태	유두석	김기태	복아영	정병용	강성래	김규설	김순천	김재연	김호균	리드산업개발(주)	박인숙	변은영	송희삼	양미선	원광희	이건철	이수영	이준배	임한빈	정승희	
전기환	박래수	고승한	김인영	윤영부	김길년	서규석	정병인	강승범	김규원	김승일	김재원	김호일	마재광	박인자	변의수	신경운	양지홍합건	유경훈	이경순	이수한	이준수	임한수	정영래	
정구영	박영민	고영미	김정수	윤준식	김명호	송용완	정성진	강영미	김기영	김승환	김재종	김홍구	맹석주	박재경	변창섭	신국희	설주식회사	유광식	이경희	이순남	이중섭	임한경	정영섭	
정세윤	송민수	고영빈	김중훈	이상호	김미경	신동현	정재교	강은희	김길후	김승효	김재학	김홍성	맹현숙	박재관	변중윤	신규식	양찬섭	유근수	이광식	이순호	이중원	임해숙	정영희	
정인호	신현기	고영수	김지연	이숙희	김미경	양경모	정치화	강진규	김남진	김안식	김재형	김한국	명정희	박재익	봉원진	신동선	양철호	유미숙	이광용	이승배	이중현	임희영	정우영	
정태원	신형철	고영식	김창기	이용민	김미수	양승조	정하진	강진성	김대중	김양식	김정문	김황래	문성오	박종관	봉윤근	신동예	염경출	유민상	이광희	이승준	이중훈	장경석	정은경	
조선환	안길만	고재우	김창순	이정민	김민수	오수균	조강석	강현구	김동암	김연식	김정승	김호일	문종극	박종국	생태교육연구소	신동호	에듀크리안트	유선우	이귀형	이승철	이지영	장남운	정은희	
조영범	유사현	고재일	김창연	이태경	김봉미	오승화	조미경	강호문	김동욱	김영근	김정웅	김희수	민경역	박종룡	서길용	신명섭	연광석	유성훈	이규선	이양우	이지영	장동대	정인수	
조찬완	윤균상	고정훈	김철수	이태운	김상관	오인철	조성아	강호승	김동일	김영란	김정일	김희숙	민경자	박종만	서대석	신명수	연구순	유순영	이규진	이연옥	이차영	장병순	정일기	
진정현	이광호	고태식	김형진	임숙자	김상철	우승윤	조영주	경쟁의실천연합	김동진	김영란	김정초	김희식	민광기	박종서	서미화	신명자	연구용	유스투게더	이규호	이영숙	이철우	장병희	정일택	
채주석	이상길	고행근	라주애	장원석	김세곤	유병국	조하심	경준용	김동현	김영미	김종구	나영구	민선희	박종선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신범식	연방회	유승덕	이근식	이영진	이철중	장선배	정장영	
천상덕	이성실	기태선	문간식	정상철	김소당	유진영	주흥중	고금순	김동형	김영민	김종기	나채경	민승기	박종순	서완석	신성일	연영규	유영경	이금로	이영희	이철희	장영건	정재량	
최낙용	이용관	김장문	박만용	정상태	김연	윤권중	최경식	고영구	김두호	김영배	김종철	남기상	민예슬	박종을	서용원	신성철	연영태	유영숙	이기만	이애원	이한훈	장재봉	정종식	
최동성	이창희	김경용	박미현	조문수	김용진	윤미숙	최경영	고영재	김말숙	김영옥	김종태	남대우	민준형	박종태	서우석	신승주	연인하	유영아	이기정	이옥인	이해승	장재식	정지성	
최문희	임영관	김관식	박승훈	좌광일	김종문	윤일규	최석남	공공디자인이중	김명배	김영재	김종태	남성옥	민형식	박종혁	서울고속(주)	신영구	연준	유옥순	이대용	이유정	이창미	장호진	정진	
최요일	전영렬	김광섭	박시환	주식회사 상성특판	김진국	윤정섭	최석림	곽규은	김명수	김영준	김주복	남성옥	박경수	박주호	서준철	신영희	연지민	유용모	이동로	이윤범	이현수	장홍원	정진아	
최원영	정승룡	김기훈	박재완	주식회사 오셀록농장	김진태	윤주만	최신수	곽덕신	김명자	김영진	김준경	남종순	박관주	박진우	서효석	신옥희	연철흙	유인봉	이두영	이인구	이현수	재단법인 화영장학회	정진원	
최종렬	차운호	김남혁	박종규	주식회사 제주오베일	김철수	이경숙	최창환	곽승호	김문욱	김영태	김준기	네모트 마사피구	박광수	박찬병	석영용	신용재	연호석	유재일	이만형	이인선	이현식	전광호	정진하	
최진희	최종범	김동욱	변성인	채호진	김태명	이경원	하종률	구남취	김미라	김영환	김준년	노근호	박구원	박창호	석준	신영진(공익취)	염현모	유주하	이맹원	이인우	이현주	전금식	정철	
홍순필	한태석	김동진	변정철	한남석	김행조	이경주	한광수	구안서	김미숙	김영환	김준수	노만균	박기번	박철규	선종열	신정식	오경아	유철호	이명관	이일만	이형각	전길자	정충선	
홍춘의		김동훈	부상원	한영조	김혜영	이명근	한문식	권기승	김미숙	김영희	김준태	노재량	박기환	박철석	설경철	신철영	오국진	유형열	이명순	이일우	이형우	전년규	정태진	
황병애	제주경실련	김명준	부윤삼	한용환	김홍철	이병덕	허영	권미경	김미현	김예진	김지연	노진호	박남순	박철완	성기남	신대경	오명진	유현덕	이명호	이창희	이형찬	전병선	정해영	
		김봉석	부인선	한재철	김효실	이상일	허종일	권성안	김미희	김완구	김진철	녹색창주협의회	박동구	박춘섭	성주우	신필희	오복수	유환철	이명훈	이재덕	이해정	전세식	정현순	
정읍경실련	강경희	김봉철	송대영	한정훈	나이란	이상춘	현선옥	권수복	김민호	김완희	김창석	대진경실련	박문희	박현순	손세원	신해운	오석송	육종길	이미소	이재영	이효숙	전용표	젠더사회문제연구소	
	강금중	김봉희	송석연	한철호	남명희	이상호	홍영중	권영기	김병우	김용국	김천식	도선봉	박미영	박형배	손윤희	신현식	오수희	윤건영	이민영	이재원	인권연대	숨	전우석	조경주
강창조	강민정	김부찬	송승호	현창석	내일시스템(주)	이서영	황종현	권오건	김병익	김용규	김철	두개비살림영농조합	박민순	박호표	손정훈	신희숙	오연경	윤관수	이범구	이재원	임건철	전창해	조경주	
고광호	강봉석	김상우	신용현	홍성화	노덕우	이선열	황천순	권태성	김병철	김용덕	김춘희	두개비친구들	박범혁	박홍래	손효진	심규석	오영미	윤기용	이범석	이재은	임근수	전희택	조국현	
고남용	강승환	김석	신중은	홍순민	노순식	이수현		권혁상	김병철	김용덕	김태성	디자인포커스	박상환	박희분	손희준	심상학	오영애	윤미정	이병관	이재춘	임기수	정경화	조규호	
고세창	강인창	김석범	안영철		류임상	이승열	청주경실련	김갑용	김봉주	김용석	김태성	류규식	박석현	반영은	송길화	심수영	오영필	윤병희	이병권	이정규	임기중	정교순	조동순	
김선일	강지용	김선호	양문석	천안아산경실련	류지현	이원자		김강일	김상무	김용태	김태인	류근모	박성호	반주현	송봉화	심영미	오윤환	윤상이	이병호	이정균	임동현	정균	조상현	
김세명	강창균	김성수	양문중	맹창호	이종욱	(사)사람과경제	김건도	김상수	김용규	김태준		류근윤	박세웅	배관희	송선호	씨투넷(주)	오제세	윤석위	이복순	이정석	임병택	정민희	조성구	
김용복	강창식	김성준	양봉석	강민숙	명진아	이종필	(사)한국농민노동조합	김경자	김선기	김원식	김태희	류덕환	박연수	배병기	송영준	안병대	오종영	윤승현	이상규	이정수	임성진	정미화	조성오	
김용철	강태운	김세검	양성국	강은선	박민숙	이종호	(주)청주제철주식회사	김경호	김선영	김유미	김명환	류연옥	박영미	배삼은	송은숙	안성기	오준영	윤정수	이상복	이정협	임성중	정병숙	조승주	
김원경	고경업	김수남	양성주	강인영	박복연	이철호	(주)평생연지나여	김계옥	김선희	김유호	김필제	류용걸	박영미	배용환	송의천	안성호	오영환	윤정숙	이상식	이종섭	임용수	정상섭	조수중	
김은정	고광희	김수연	양시경	강태윤	박상면	이현정	(주)세일	김관식	김성수	김윤모	김학민	류우열	박영수	백승협	송일근	안영숙	오창민	윤진현	이상중	이중수	임용현	정상신	조승연	
김을수	고내수	김승필	양우선	강필호	박수석	장경식	(주)청주제철에너지센터	김광남	김성천	김은경	김학실	류재문	박영숙	법무법인 주성	송재경	안장현	오태경	윤찬열	이석희	이중실	임은정	정상욱	조영화	
김일중	고동철	김승훈	양진웅	강희두	박순환	장기수	(주)허밍건설	김광렬	김송일	김은옥	김항자	류재형	박영순	변광섭	송중찬	안재홍	오태진	윤태한	이선미	이중윤	임의순	정상완	조용숙	
김재오	고맹호	김양보	오승용	고병현	박종갑	장원철	강대성	김광복	김수열	김응일	김현상													

조운행	지동규	충북경제지리연구원	한수환	홍강희	황성주	김승현	박상규	신선철	이상철	전운성	허장현
조은애	지민	충북민주연론시민연합	한승환	홍경선	황영미	김영준	박상렬	신해숙	이석원	전호성	허종영
조을선	지현성	충북생명연구소	한영선	홍석원	황종빈	김용식	박정근	안봉진	이승준	정의성	황덕호
조이현	최재국	충북시민재단	한은례	홍성학	황희연	김용재	박형일	안호춘	이원규	정지만	황해숙
조일원	최정호	충북지리개발협의회	한인섭	홍성학		김정현	방명열	양태식	이은영	정종교	
조일현	최종문	충청주수업개발협회	한정현	홍순주	<b>춘천경실련</b>	김중식	방수미	윤준형	이인섭	정휘돈	
조정식	최진욱	표한홍	한진석	홍승표		김진상	방수진	유재원	이종민	조성모	
조춘희	최진안	풀꿈환경재단	함종철	홍우표	고태규	김찬중	변용환	윤장혁	이택수	조성자	
조항진	최진욱	풍경섭	허석렬	홍응표	권용범	김평안	변좌용	윤재경	이희중	최영진	
조형규	최충진	하옥란	허성만	황경수	길정숙	김한택	변지량	윤재선	임재선	최희수	
조혜경	최태호	하재성	허영	황규혁	김광배	남형우	석영기	윤진현	전규호	춘천상공회의소	
주서택	최현숙	하태종	현상주	황동훈	김남철	박경철	손현기	윤학로	전근우	하상준	
주재구	최현태	한범덕	현진	황릭훈	김대영	박대진	손홍주	이관행	전만식	한희민	
주재현	최형도	한성화	협동조합친구들	황미화	김석중	박도수	송창근	이복연	전성휘	함태성	
주창백	최호균	한성철	형미희	황선건	김선배	박동운	신길호	이상섭	전양호	허영준	

### 중앙경실련

사무총장	02-741-8566	윤순철
기획교육팀	02-766-5626	국장: 김민기, 간사: 오세형
회원홍보팀	02-766-5627	부장: 채준하, 간사: 윤은주
경제정책팀	02-3673-2143	국장: 권오인, 간사: 최예지, 정택수, 이성운
정치사법팀	02-3673-2141	국장: 김삼수, 간사: 유애지
사회정책팀	02-3673-2145	간사: 박지호
국제팀	02-766-5623	

부동산국책감시팀	02-3673-2146	국장: 김성달, 부장: 최승섭
(사)경제정의연구소	3673-2144	국장: 권오인
(사)경실련통일협회	3673-2142	국장: 김삼수, 간사: 조성훈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3673-2147	국장: 남은경
시민권익센터	766-5624	간사: 권태환
소비자정의센터	766-5625	국장: 윤철환
월간 경실련	766-5626	이사: 음유정, 김용재

### 지역경실련

지역경실련협의회 031-253-2266

#### 광역시

광주경실련	062-528-4851	처장: 김동현, 부장: 박수민
대구경실련	053-754-2533	처장: 조광현, 부장: 최은영
대전경실련	042-254-8060	처장: 이광진, 협동사무처장: 김태형, 김창근, 부장: 서해림
부산경실련	051-761-3951	처장: 이훈진, 부장: 윤정선, 팀장: 배성훈
인천경실련	032-423-2950	처장: 김승원, 부장: 김성아, 팀장: 이해정

#### 경기·강원권

경기도협의회	031-253-2265	
광명경실련	02-2614-1224	국장: 허정호, 간사: 최미영
군포경실련	031-392-3111	국장: 오은정
수원경실련	031-253-2266	처장: 노건형, 부장: 유병욱
안산경실련	031-402-6116	국장: 고선영
김포경실련	031-997-0044	국장: 이종준
이천·여주경실련	031-635-7575	국장: 주삼운, 간사: 변정혜
양평경실련	031-772-2091	국장: 여현정
강릉경실련	033-645-0828	국장: 심현섭
속초경실련	033-636-6631	국장: 김경석, 부장: 김경아
춘천경실련	033-241-9486	국장: 권용범, 간사: 오연옥

#### 충청권

천안·아산경실련	041-552-2040	국장: 정병인
청주경실련	043-263-8006	처장: 최윤정, 국장: 이병관, 유영아, 부장: 신명자
경상권		
거제경실련	055-637-9451	국장: 이양식
경주경실련	054-773-7851	간사: 왕서정
구미경실련	054-453-1787	국장: 조근래

#### 전라·제주권

순천경실련	061-751-9993	간사: 장홍영
여수경실련	061-643-2110	
목포경실련	061-283-4571	간사: 김창모
군산경실련	063-443-5733	간사: 서재숙
진주경실련	063-273-4903-4	간사: 고동우
정읍경실련	063-536-6225	국장: 김은정
남원경실련	063-633-6662	정책위원장: 이점수
제주경실련	064-726-2530	팀장: 김신숙